第249回國會 (臨時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4年8月26日(木)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계속)
   가. 외교통상부소관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 외교통상부소관
3. 2003회계연도기금결산(계속)
   가. 외교통상부소관
4.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계속)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소관

審査된案件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계속) ····· 1
   가. 외교통상부소관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 1
   가. 외교통상부소관
3. 2003회계연도기금결산(계속) ····· 1
   가. 외교통상부소관
4.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계속) ····· 49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소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임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국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지 못한 통일부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9월 정기국회에서 하기로 간사회의에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열릴 때마다 행정부처가 거의 모든 직원이 국회에 나오기 때문에 각 부처의 업무가 매우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회의에 직접 관련된 직원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분들은 돌아가셔서 일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필요하신 분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일을 보시고 국·실장급도 꼭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니면 돌아가셔서 일들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계속)
가. 외교통상부소관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 외교통상부소관
3. 2003회계연도기금결산(계속)
가. 외교통상부소관

○위원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상부소

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외교통상부소관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국제교류기금결산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상부 차관 나오셔서 이상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존경하는 임채정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외교통상부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와 관련된 저희 외교통상부의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2003년도에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이라크 전후 복구 및 정세 안정화, 한미 및 우방국과의 관계 강화·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방시대의 경제·통상 외교 전개와 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다자외교·문화외교 및 영사·재외동포 관련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국정과제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경제중심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적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주요업무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미국과 북한 중국 3국 간 북경 3자회담 이후 우리 대통령의 5월 방미, 6월 방일 그리고 7월 방중을 통해서 한반도 주변 주요국을 대상으로 정상외교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북한 핵문제를 다자적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 아래 6자회담 추진에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3년 8월에 개최된 제1차 6자회담에서는 참가국들 간에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그리고 단계적·포괄적 해결이라는 기본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함으로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농축우라늄 문제를 포함한 핵프로그램을 폐기해서 조속히 전략적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핵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한·미·일 공조와 중·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접촉 기회를 활용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하고 설득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라크 전후 복구 및 정세 안정화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공병 및 의료지원 부대인 서희·제마 부대를 이라크 나시리아에 파견하였고 5월 주이라크대사관을 재개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라크 난민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10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재건복구를 위하여 5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의 재건지원 노력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3년 10월 국군의 추가 파병을 결정하였으며 알제리 대통령, 이라크 통상장관 등 주요인사 방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파병 취지를 설명하고 이라크 주변 및 관련국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미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 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을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은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과 경제협력 관계의 심화에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과 다섯 차례에 걸친 한미 외무장관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위한 공조체제를 굳게 하였습니다.

2003년에 한미 양국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연합방위력을 유지 강화하면서 한미동맹을 현대화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기지를 장차 2단계에 걸쳐 오산-평택과 대구-부산을 축으로 하는 2개의 허브로 통폐합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용산기지 이전을 조기에 마무리짓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국과의 관계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과는 노무현 대통령의 6월 국빈방문을 비롯하여 다섯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

다. 여기에서 한일 FTA 관련 정부간 교섭, 미래 지향적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실질 협력관계의 기반을 넓히고 우호친선 분위기를 강화하였습니다.

중국과는 현재 고구려사 왜곡 등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통해서 양국관계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바 있으며,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한·러 상호이해 및 협력증진 사업'을 통해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2003년 10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이를 통해서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동시에 외교통상부는 글로벌 외교를 통해서 구주, ASEAN 및 중남미, 아중동 국가들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방시대의 경제·통상 외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외의존도는 70%에 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무역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칸쿤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특히 농업·서비스·반덤핑 분야 등에서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과 공조그룹을 형성해서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3년 2월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서명하였고 다수국가와 FTA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여 이에 따라서 일본 및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및 EU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제반 협의채널을 통하여 통상현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역상대국의 WTO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한·EU 조선보조금 분쟁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 2002년도 대비 5500만 달러가 증가해서 총 3억 34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의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재외동포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영사업무 인력을 보강하고 이를 통해서 사건·사고 처리 능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사고 다발 공관의 경우 경찰 주재관과 고문 변호사를 파견 내지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사민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영사 서비스 안내 팜플릿을 작성 배포하는 한편 영사민원 서비스 개선작업반을 운영하여 개선사항들을 점검 추진해 나갔습니다.

앞으로 고 김선일 씨 피랍·살해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법 개정 등 재외동포 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우리 동포정책에 대해 중국 등의 이해와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재외동포사회의 역량 강화와 자조능력 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재외동포재단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 교육, 경제 등 분야에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재외동포 포털 사이트인 코리안닷넷(korean.net)을 구축하여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자외교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유엔 등에서의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인류보편적 가치의 신장과 군축·비확산체제의 강화, 테러 방지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제기구 이사국 진출에 적극 노력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등의 이사국으로 피선되어 국제사회의 중견국가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에 힘써 왔고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제도 및 국제기구인력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현재 38개 국제기구에 총 231명의 우리 국민이 근무하고 있으

며,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 작년에 이종욱 박사가 사무총장으로 피선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경제력 신장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예산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산 증가액이 이런 성향을 뒤따라가지 못해서 2001년 이래 국제기구 분담금이 미납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협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WTO DDA 협상 재개를 위한 APEC의 정치적 의지 표명에 동참하고, 테러 방지 등 지역 안보조치 강화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어 개최된 2003년 10월 ASEAN+3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 주도로 설립된 동아시아연구그룹(EASG)이 권고한 17개 협력사업을 2006년까지 이행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동아시아포럼 창립총회를 작년 12월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3년 7월에 개최된 ASEM 외무장관회의에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ASEM 회원국들의 지지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화외교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부응하여,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문화외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졌고 한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문화를 세계 각국에 소개하는 문화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와 문화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UNESCO 등 문화 관련 국제기구 활동에도 참여하여 2003년 11월에는 우리 판소리가 세계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외교 관련 국정과제 추진의 일부인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을 위한 대외 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외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양자 및 다자회의 계기에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력 확보에 노력하여 왔고, 남북간 교류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 노력을 해 왔습니다. 남북 간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북아협력대화(NEACD) 등 기존의 다자안보협의체를 활용해서 동북아 평화협력체의 구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외교적 기반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우리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과 번영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적극적인 경제·통상 외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동북아 물류중심지 구축을 위한 남북철도와 대륙철도의 연계 기반 조성을 하였고 김포-하네다 공항 간 국제선 취항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역내 금융 허브로의 발전과 역내 국가 간 에너지·자원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3년 10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시 채택된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은 향후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교 통상 역량 강화 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외교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 인력 그리고 업무시스템에 대한 자체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작년 4월 대통령에 대한 연두업무 보고 시 외교부 자체혁신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이어 5월과 8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자체 기능조정 및 조직개편안을 검토 제출한 이래 정부혁신위 및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외교통상 역량 강화를 위한 기능조정 및 조직 개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무태세의 일신을 위해서 작년 12월 복무, 영사, 회계 및 감사 Task Force를 구성하였고, 장·차관 주도로 혁신팀을 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혁신체제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외교통상부 세입예산은 총 645억 110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실제로는 833억 4000만 원을 수납하여 188억 2900만 원의 세입초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주 이유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여권 발급량에서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589억 8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여기에 예비비 전년도 예산 이월액 및 수입대체 경비초과 승인액 등 총 377억 3000만 원이 추가됨으로써 예산 현액은 7967억 1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예산 현액에 대한 집행액은 7871억 9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9%에 이르렀습니다. 동 집행잔액 95억 2900만 원 중 19억 60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고, 75억 6900만 원은 불용액으로 국고에 납입 조치하였습니다.

국제교류기금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수입예산은 총 473억 530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실제 수입액은 422억 83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89.3%를 달성하였습니다.

수입액이 예산액보다 감소한 이유는 작년도 사스 발생으로 인한 해외여행객의 감소로 국제교류기여금 수입액이 284억 7500만 원으로 예산액 364억 6300만 원 대비 78.15%밖에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과 동일한 473억 5300만 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422억 8300만 원이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서는 기금운영비와 국제교류사업비로 177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여유자금 운용 245억 6900만 원 중 2억 64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243억 500만 원은 국제교류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 기획관리실장이 그리고 국제교류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이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외교통상부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 및 국제교류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기획관리실장 송민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03년도 외교통상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두 가지 자료 중 흰 책자는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및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하늘색 책자인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흰 책자인 결산개요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와 그 구체내역 및 수입대체경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어 예비비 지출내역, 국가채권·채무 현황, 정부출연금 및 보조금 집행내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흰 책자 1페이지, 2003년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645억 110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실제로는 833억 4000만 원이 수납되어 188억 2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7589억 8900만 원이었으나 예산현액은 7967억 19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7871억 9000만 원이 실제 집행되어 75억 6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의 구체내역으로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188억 2900만 원이 초과되었는데 그 이유는 주로 수입대체경비 수입에서 여권발급수수료 수입 등이 당초 예산액보다 약 212억 1300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세출예산은 7589억 8900만 원이나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금액 13억 3000만 원, 예비비 271억 6900만 원, 수입대체경비 초과 사용액 92억 3100만 원이 추가되어 예산현액은 7967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7871억 9000만 원이 실제 지출되

었고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미지급금 이월 등으로 19억 6000만 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절감, 계획변경 및 취소, 환차익 등으로 인한 세출 감소로 75억 69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항, 세항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예산의 이용 및 이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용액은 11억 4500만 원입니다. 이는 본부와 재외공관의 인건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이고 이체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예산의 전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전용액은 123억 5100만 원으로 주요 전용사유는 인건비 부족 71억 7900만 원, 사업계획변경 14억 1000만 원, 사업량 증가 2억 3200만 원, 기타 국고채 원리금 상환 등으로 35억 3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6페이지, 이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월액은 19억 60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를 설명드리면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으로 13억 원, 기본사업비 이월 4억 3300만 원, 미지급금 이월 등으로 2억 27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늘색 책자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의 이월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17페이지, 불용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불용액은 75억 6900만 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분 14억 9500만 원, 예산절감분 9억 3200만 원, 집행잔액 46억 1400만 원, 환차로 인한 세출 감소 5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8페이지, 수입대체경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는 603억 1700만 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으나 815억 3000만 원이 실제 징수되어 212억 12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해외여행객 수의 증가로 인하여 여권발급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입대체경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은 150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예산현액은 243억 730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초과 지출액 92억 3100만 원과 전용액 1억 600만 원이 초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243억 7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19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는 9개 목적에 총 271억 69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중 256억 5000만 원이 집행되고 2900만 원이 이월되었고 14억 90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123억 원, 대통령 해외순방경비로 111억 9000만 원, 북한 이탈주민 지원경비로 8억 1000만 원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국가 채권·채무 현황에 관해서는 자료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부출연금과 보조금 집행내역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출연금은 한국국제협력단에 1655억 8100만 원, 재외동포재단에 225억 1500만 원을 출연 집행하였고, 보조금은 재외동포단체, 여권발급 지자체 등에 총 174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외교통상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기금 결산에 대해서 한국국제교류재단 권인혁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권인혁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2003년도 국제교류기금의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03년도에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 및 국가 이미지 제고와 외국과의 우호협력 증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외 한국연구 진흥과 한국연구학자 지원, 인적 교류, 문화교류, 출판자료 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외국과의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재단의 사업추진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해외 한국연구 진흥 분야에서 지

역별 국가별 한국학 발전단계에 맞춰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 걸쳐 해외 한국연구의 심화 및 확산을 도모하였으며, 문화교류 분야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동양박물관과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에 한국실을 개설함으로써 미국 동서부의 대표적 박물관에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항구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적 교류, 출판자료 지원 등 다른 분야의 사업추진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 중 2003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 5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03회계연도 국제교류기금 결산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자료 중 국제교류기금 2003회계연도 기금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저희 재단의 사업개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결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문입니다.

2003년도 수입예산은 473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입은 422억 8300만 원으로 50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 수입은 재산수입 135억 500만 원, 경상이전수입 국제교류기여금 수입 284억 7500만 원,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5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억 4800만 원입니다.

수입이 당초 계획 대비 약 11% 감소한 것은 사스 등에 따른 해외여행자 감소로 재단 기금의 주 수입원인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액이 목표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출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 부문 중 기금운영비와 경상사업비 예산액은 189억 7100만 원이며 이 중 177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93.4%의 집행비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지출액 177억 1400만 원의 내역은 기금관리비 39억 5400만 원, 사업운영비 2억 3000만 원, 경상사업비 135억 3000만 원입니다.

지출 부문 중 경상사업비 세부지출내역은 해외한국연구진흥사업으로 53억 7400만 원, 해외한국연구학자지원사업으로 30억 2800만 원, 인적교류사업으로 13억 4600만 원, 문화교류사업으로 18억 6900만 원, 출판자료지원사업으로 19억 1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유자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여유자금 운용 예산은 283억 8200만 원이며 실제 운용액은 245억 6900만 원으로 계획대비 13.4%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예산불용액으로 12억 5700만 원이 발생한 반면 수입에서 50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유자금 운용 245억 6900만 원 중 2억 64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43억 500만 원은 국제교류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말 현재 국제교류기금 적립금 총액은 230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변경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예산변경 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항 범위 내에서 세항 간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 및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월액은 2억 6400만 원이며 사업별 이월액은 해외한국연구진흥 2억 3500만 원, 출판자료 지원 2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이월내역 및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불용액은 9억 9300만 원이며 사업별 불용액은 기금관리비 1억 2000만 원, 사업운영비 2억 900만 원, 경상사업비 6억 6400만 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세부 사업별 불용내역은 해외한국연구진흥 1억 3500만 원, 해외한국연구학자 지원 2억 6200만 원, 인적교류 1억 원, 문화교류 6700만 원, 출판자료 지원 1억 원입니다. 자세한 불용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재단의 2003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는 배포해 드린 자료 중 2003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 5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국제교류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통상부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수입대체경비수입의 연례적 과소계상입니다.

수입대체경비가 예산액 대비 135% 초과된 815억 30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수입대체경비수입 예산액의 과소계상문제는 연례적으로 반복되어져 국회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도 시정이 요구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향후 수입대체경비수입 예산액은 현실에 부합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입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미 5개국 지원 및 콜롬비아 재건지원 사업의 과다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미 5개국 지원사업은 1998년 10월 태풍 미치로 인한 중미 5개국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미주개발은행에 21만 미불($)을 기탁하기로 약정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2003년의 경우 약정액 21만 미불($)보다 8047 미불($)을 초과한 21만 8047 미불($)을 집행하였습니다.

초과 지출한 사유는 2000～2002까지 환율변동 등으로 3만 7764 미불($) 상당의 금액을 과소 집행함에 따라 이를 보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으나, 예산은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에 한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거의 사유로 초과 지출한 것은 적정치 못한 예산 집행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콜롬비아 재건지원사업은 마약 및 내전으로 황폐화된 콜롬비아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미주개발은행에 2억 5000만 원을 기탁하기로 약정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2003년의 경우 약정액 2억 5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을 초과한 2억 6000만 원을 기탁한 것은 불필요한 과다집행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족액 확보를 위한 연례적인 이·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 본부, 외교안보연구원 등의 인건비 부족액 확보를 위하여 총 전용액 중 58.1%인 71억 79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이용액 11억 4500만 원 전액을 이용하였습니다.

첫째, 이와 같은 결과의 주된 사유는 외교통상부의 2003년 12월 말 현재 정원은 1720명이나 현원은 1757명을, 별도정원의 경우에도 정원은 103명이나 현원은 125명을 운영하고 있는 등 부적절한 정원관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정원에 맞게 현원을 유지하거나 현실에 부합되는 정원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부의 경우 고위직인 10등급 내지 14등급의 정원초과 인원은 총 34명에 이르는데, 이는 급변하는 외교수요에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적절치 못하므로 본부와 공관 간 적정한 인력재배치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재외공관별 부서별 정원 운영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인력수급상황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재외공관별 부서별 정원 기준을 마련하여 현실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새외교통상부 프로젝트 사업의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외교통상부 프로젝트 사업은 외교통상부의 조직·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기능진단을 통해 외교통상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집행잔액 2억 4400만 원으로 수행한 것입니다마는 이를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특히 새외교통상부 프로젝트사업이 12월 31일에 비로소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억 4400만 원을 이월한 것은 사업수행시기 등의 측면에서 적절치 못한 예산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익태 유가 기념관 건립사업의 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익태 유가 기념관 건립사업은 스페인에 소재하고 있는 애국가의 작곡가 고 안익태 선생의 유가를 기념관화 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도에 신규로 9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비 9억 7400만 원 중 35.0%에 상당하는 3억 4100만 원을 인건비 부족액 충당을 위하여 이용하고 나머지 6억 3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은 고 안익태 선생 유가는 스페인 본토로부터 원격지인 마요르까 섬에 소재하여 우리 공관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우리 국민의 방문도 용이하지 않은 점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이는 사업 추진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의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반적인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등 상당수의 분담금 예산액은 1210억 5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청구액보다 과소하게 책정됨으로써 이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부에 있어 다소 융통성이 있는 평화유지활동 분담금 예산액 382억 원 중 51.8%인 198억 300만 원만을 납부하고 183억 700만 원은 체납이 예상되는 여타 분담금의 재원으로 집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평화유지활동 분담금의 체납액은 2003년 12월 말 현재 375억 4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유엔본부 개축계획, IAEA 핵테러보호기금 등 13개 신규 분담금으로 153만 미불을 국회의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집행하였고 당초 예산에 계상된 개도국간경제협력기금, 한-FAO신탁기금 등 7개 분담금의 경우 전혀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산 집행은 국회의 예산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외교안보연구원의 운영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교안보연구원에 본부 대사 명목으로 외교안보연구원 정원 87명 대비 31.0%에 상당하는 27명의 고위직이 대기 중인바, 이와 같이 외교안보연구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간부들의 대기장소로 활용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외교안보연구원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OECD 자문관 파견사업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자문관 파견사업은 외통부 직원 1인을 자문관으로 OECD 사무국에 최고 3년을 한도로 파견하여 무역 및 통상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습득, 향후 우리 국내 정책 수립 및 이행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도 예산 현액은 1억 52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프랑스 소재 주OECD한국대표부에 26명의 각 부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OECD 자문관으로 외교통상부를 포함하여 18개 부처 총 21명이 파견되어 있고 특히 재경부 및 산자부는 각각 3명의 자문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1인당 약 연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OECD 자문관 파견사업에 대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외국민 밀집지역 영사서비스 확충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 밀집지역 영사서비스 확충사업은 긴급구난활동, 순회영사활동, 현지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의 권익 침해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도 예산 현액은 4억 5900만 원으로 77.1%인 3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재외국민의 사건 사고 및 긴급구조를 요하는 재난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외공관 행정지원 인력 운영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공관의 행정지원 인력운영경비는 행정지원 인력의 고용계약 체결에 따른 보수 및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되는 것으로 2003년도 예산현액은 507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507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첫째, 주일대사관의 행정 지원 인력의 수는 72명, 주미대사관 60명, 주러대사관 48명인 반면에 주중대사관은 무려 119명에 이르는 등 주요 공관별 행정 지원 인력의 고용에 있어 불균등한 문제가 있는바, 공관별 교민 수, 여행자 수, 영사업무량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공관별로 적정한 행정 지원 인력 수를 정하여 근무케 함으로써 영사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현재 고용된 2131명 중 97.2%인 2072명이 운전 등 단순 일반직이며 경제·통상 분야의 전문직 지원 인력 수는 나머지 2.8%인 59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일반적인 행정지원에서 탈피하여 통상·법률·영사 등 제 분야별로 전문화된 전문보조인력의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공관의 업무수행능력 및 전문성을 제고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기금의 활용도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243억 1000만 원이 국제교류기금에 적립됨으로써 2003년도 12월 말 현재 기금의 적립 누계액은 2303억 41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

다.

2003년도의 경상사업비는 135억 3000만 원에 불과하나 국제교류기금에 적립된 금액은 경상사업비 대비 179.7%인 243억 1000만 원에 이르는 등 지출구조에 있어 불균형적인 측면이 발생함에 따라 국제교류기금이 과도하게 적립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교류 전문실행기구로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외교통상부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 한국국제협력단과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외교통상부 산하단체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외교통상부에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는 외통부가 국제기구에 의무부담을 하고 있지요? 의무부담현황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사례가 있는데 이 지원현황을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무부담과 관련해서는 OECD 국가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순위인가를 밝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외교부가 외교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부 혁신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사항과 인력보강 문제를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제교류기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2003년도에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기획예산처에서 평가를 했는데 국제교류기금이 여러 가지 경영 개선이라든지 사업운영 쪽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운용 부분에서는 상당히 낮은 평가가 났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적립금이 굉장히 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3년 전에 비해서 44.3%나 증액이 된 적립 누계액이 2303억 4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립금을 많이 적립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많은 액수의 적립금을 남겼는데 2003년 말로 국제교류기금이 폐지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지상황에 달해서 제대로 사업을 벌이지 못한 것이 사업을 신장하지 못한 주요인이고요. 그러나 금년도에는 2003년도 대비 33% 증가해서 236억으로 대폭적으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세출사업비가 늘어났군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예.

○한명숙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존치하기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예.

○한명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제교류재단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기획예산처에서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을 국제교류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예.

○한명숙 위원 그런데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을 국제교류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교류재단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사실은 크게 봐서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는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국제교류기금이 기금법이라는 특별한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그 법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동포재단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 기금에서 지원하는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외교통상부 본부를 통해서 법제처에 의견을 문의해 보았습니다. 법제처에서의 답변은 좀 곤란하다는 내용이라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한명숙 위원 기획예산처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했는데 법제처에서의 해석은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재 문제점을 안고 있군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동포재단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이광규 사업비를 거기에서 전부 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법제처의 해석마냥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데 국제교류재단에서 받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되겠군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이광규 예.

○한명숙 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결국은 국제교류기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재단에도 기금에서 일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제교류기금 잉여금을 재외동포재단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금을 그어서 국제교류기금 성격에 맞게 국제교류재단 측에서 보다 바람직한 사업을 확대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동포재단 쪽에서는 동포재단 쪽 나름대로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범 위원 박성범 위원입니다.

외교부에는 늘 변하는 국제상황에 따라서 돌발적인,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마는 금년 들어서는 참으로 지혜와 용기와 애국심을 발휘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김선일 씨 사건, 고구려 역사 문제……

오늘 날짜 요미우리신문에 보면 일본이 새해 외교목표를 설정했는데 다분히 아주 도전적이고 일본의 본성을 잘 드러내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중점목표를 '국민을 지키고 주장하는 일본외교' 이렇게 잡았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주목되는 외교정책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중점목표로 두고 있는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일본의 목소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본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로서는 고구려 역사 문제에 이어서 또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련에 봉착해야 되는 단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방향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국제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하게 나와 있고, 또 한국이 주장하는 영유권에 대한 반박자료를 학계 등 각계를 통해서 광범하게 수집을 하겠다는 의사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늘 터졌을 때에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일본의 이러한 공격적인 외교에 대비해서 우리로서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아침에 일본의 새해 외교정책방향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일본의 새해 외교정책방향과 특히 구체적으로 나온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빼고 솔직하게 외교부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소위 보통국가화 문제, 또는 일본 내에서 일어나는 우경화 또는 민족주의 문제를 저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두 가지 방향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독도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와 같이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것들은 정면으로 1 대 1로 양보 없이 마주쳐서 이 문제를 지키고 해결을 하고요. 보다 큰 전략적인 문제로 일본의 보통국가화, 또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을 지키고 주장을 해 나가겠다는 문제는 물론 우리 힘으로도 하지만 한일동맹의 틀 내에서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0년대부터 동북아지역, 동아시아지역에 생성되고 있는 다자체제의 틀, APEC이라든가 ARF, 또 ASEM 등 이런 틀을 활용해서 일본을 거기에 묶어 놓음으로써 일본이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아젠다를 정하기보다는 주변국가하고 협력을 통해서 또 주변국가의 이해를 감안하면서 해 나가도록 대처할 생각입니다.

○박성범 위원 그저께 마이니치 보도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이 80년대에도 한 번 있었고, 90년대 들어와서도 간헐적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고이즈미 총리가 9월 하순에 유엔총회에 가서 연설을 통해서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회원국을 통해서 상당한 외교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기본적인 입장이 지금쯤은 정리가 되어서 일본을 상임이사국을 시켜서 선린우호국으로, 인접국으로 그 사람들의 힘이 실제로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나오면 돕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으로 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합당하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는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외교적으로 중요한 현안인데 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늘 그때의 상황을 봐서, 회원국의 동향을 봐서 그저 흐름에 쫓아가는 태도를 가져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기본 입장을 세워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일본이 상임이사국 회원국이 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일본이 유엔 분담금의 약 20%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상임이사국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예산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많은 압박이 있고, 또 박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이 우리의 중요한 경제파트너이자 이웃으로서 거기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상임이사국이 되어 버리면 지금 현재 유엔 안보리 구조가 15개국이고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둘로만 되어 있는데 제2의 카테고리에 이사국이 생기면 저희는 거기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제3 내지 제4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구조상 우리한테 이로울 수 없는 형국이 구성되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양쪽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공식 입장은 일본이 국제기구에 기여하는 바에 따라서 역할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욕구는 알고 있지만 안보리 개정문제는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 또 우리의 입장 등 유사한 나라들의 입장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는…… 흑백으로는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범 위원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 당장 이 자리에서 '예스, 노우'의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우리도 이런 문제가 예견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되도록 도와주고 우리도 거기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절대 안 된다면 우리가 절대 안 되는 방향으로 설 수도 있는데 늘 결정할 때 어물어물해 가지고 그저 찬성도 반대도 아닌 것으로 해서 인접국으로서 얻을 것도 별로 얻지도 못하는 결과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유엔총회 전에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stance)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중국에서 또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이 문제는 유랑 탈북인들을 북한에서 다시 데려가거나 관계국에서 보내는 일련의 사건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봐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나갔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붙잡혀 갔는데 이것은 엄연히 납치이지요. 이제 자국민의 납치사건까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과연 남북관계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해서 통일부 소관으로 봐야 될 문제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분명히 자국민에 대한 납치사건입니다.

자국민의 납치사건은 우리 헌법을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책무 중의 하나이고 김선일 사건도 불행하게 됐습니다마는, 이런 납치사건이 생겼을 때도 정부가 어정쩡한 자세를 취한다면 이른바 국민들로부터 정권의 윤리적 정당성도 상실해 버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 측에서는 8월 초순에 탈북주민들이라고 직접 지칭은 안 했습니다마는 보복을 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게 되면 협박을 실현하는 일련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 하여튼 남북관계를 떠나서 이것은 외교부가 나서서 자국민의 납치사건에 대해서 국제적인 협조까지 받아 가면서 강

력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박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얼마 전부터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이고, 특히 남편 되시는 분이,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 납치된 분이 일반탈북자가 아니고 특수탈북자가 되기 때문에 벌을 엄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안 되면 일반탈북자가 되어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이 쉽게 있어서 보도협조 요청을 했던 것인데 그만 보도가 되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범 위원 결산회의이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한 가지 지적을 해 둡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외교부의 예산을 보면 세입에 대한 예상이 30% 이상씩 빗나가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갑자기 해외여행자가 늘어서 여권이 늘었다고 얘기하는데 여행자가 갑자기 는 것은 아니고 추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이와 같이 세입이 30%씩 차이가 나고, 예비비 지출도 기록을 보니까 예산 국회 때마다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말고 정식 예산에 넣어서 쓰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자리만 피하면 또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짠다면 그야말로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 권위를 상당히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불용액도 타 부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고 전용도 많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예산편성은 새해 예산에는 확실하게 바로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박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규 위원 지금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대륙붕 확대·연장, 영토 확보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8일자 마이니치 신문보도에 의하면 대륙붕 경계 연장을 위한 연구를 러시아 브라질 호주 등 약 40개국이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관련정보 수집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 두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이어서 또 일본과 대륙붕 영토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는데 외교통상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지금 현재까지는 현안으로 대두가 안 됐습니다마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유의해서 살펴보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규 위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허겁지겁하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었는데 우리도 미리 논리적으로 연구를 하고 사전에 대비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통일부 예산 집행내역 결산심사내용을 보고 오늘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보다 훨씬 편성 의도와 달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정원은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인원을 늘린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렇습니다.

○김혁규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통해서 인건비 보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비 과목을 전용해서 인건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어제도 있었고 외교통상부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집행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고유가 충격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 때 중동지역의 넘치는 달러를, 우리가 중동건설 붐을 만들어서 우리 경제를 성장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을 보니까 러시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원자재, 머니가 상당히 풍부한 나라를 공략할 필요가 있고, 특히 중동지역의 원유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넘쳐나는 돈을 우리가 외교통상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원유 수출국이 지난해보다 350억 달러나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넘쳐나는 오일달러를 우리가 선점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통상외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외교통상부는 지금 어떤 계획에 의해

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중동지역의 지·상사나 건설업체의 진출을 통해서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 확보 차원에서는 우선 이라크와 관련해서 우리가 재건을 위해서 파병을 합니다마는 중동에서 원유의 70%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안정이 우리의 원유 공급과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고, 안정이 될 경우 방금 말씀하신 오일달러의 선점을 위해 우리가 건설 수주 같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적하신 대로 러시아와 특히 중앙아시아에 있는 가스와 원유의 개발 내지 송유관 건설을 통한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활발할 외교를 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혁규 위원 특히 중동지역에 나가 계시는 대사님들께 외교통상부가 지시를 해서 넘쳐나는 350억 달러라는 오일 머니를 우리나라의 비즈니스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노력하라는 당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9월 중에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있을 예정이지요? 사실 러시아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자원 확보가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데 외교통상부장관께서는 이번 순방에 대해서 자원 확보, 또 러시아도 지금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통상부문과 자원확보 부문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 부분은 곧 있을 저희 외교일정과 연결되어 있고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나호트카공단 확보문제라든가 시베리아지역의 원유와 가스 확보 문제는 자세한 것을 별도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김혁규 위원 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보면 앞으로 일본, 싱가포르와 FTA 협상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일본과의 FTA협정은 저는 대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본이 우리보다 부품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산업기술이 앞서 가고 있는데 FTA협정을 통해서 완전 개방이 되면 그나마 지금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부품산업들이 결국 공장 문을 닫게 되는 결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일본의 각종 부품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부품업체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일본을 따라갈 수 없는 부품은 무엇인지를 상세히 조사 분석해서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완전히 개방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가 1, 2년 연구를 더 하고 노력하면 일본 부품과 같은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국의 부품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작업일 것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일본의 부품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비슷한 기술의 부품을 연구해서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또 영 자신 없는 것은 완전 개방식으로 해서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FTA 협상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한일 FTA는 일단 내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결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GDP의 약 2.8%의 신장을 갖고올 좋은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방금 우려하신 대로 무역역조가 심화될 것이 틀림없고 산업부문별로 고통 받을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로 저희가 5차 회의를 경주에서 끝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유예조치를 한다든지 기간을 늘린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협상 당사자들이 우리 업계와 많은 접촉을 갖고 업계의 처지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체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혁규 위원 세부적으로 부품별로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김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김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수석전문위원 자료에도 나오고 저희가 뽑은 자료에도 있는데 안익태 유가 기념관 건립사

업이 추진되다가 취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보고드린 것처럼 마요르까섬이 우리 교민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고 대사관에서 멀어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 세웠던 것과 차질이 빚어진 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자세한 답변은 혹시 알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문화교류국장이……

○박세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기념관 건립사업을 처음에 입안하고 추진하던 정책 주체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좋은 뜻에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나 사정이 발생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로 써 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예상 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추진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중단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추진한 분들이 애국심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된 것이 비교적 최근이고 유가족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표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책임소재 규명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박세일 위원 저는 꼭 중징계를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신중하게 충분히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좋은 뜻에서 하다가도 예상하지 않은 사정이 발생해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일을 예상하지 않고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경중을 따지지 않고 내부적인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장관께서 챙겨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은 사건의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업무를 대하는, 나라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여권발급과 관련해서 원가계산 부분에 대해 그동안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한국조폐공사를 통해서 여권을 만드는데 인건비 계산방법이 법에 맞지 않아서 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나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르면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조사노임을 갖고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조폐공사의 실질임금을 갖고 지급을 해서 2002년, 2003년 지난 2년간 7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지적이 감사원 지적에도 있었고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박세일 위원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이것은 분명히 법을 벗어나서 집행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2002년에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도 똑같이 잘못 책정되어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우선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여권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조폐공사 한 군데뿐이고 따라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폐공사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조폐공사하고 교섭에 들어갔고 일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박세일 위원 감사원 지적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아닙니다. 맞습니다.

○박세일 위원 2002년에 지적을 했으면 2003년부터는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귀중한 시간에 행정의 책임을 맡으신 실국장님께서 많이 와 있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와서 이런 상임위원회를 여는 것은 단순히 형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나라를 잘 만들어 보기 위해서, 서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저희들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국회에서도 지적하고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일이 1년이 지나도록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런 일을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법에도 결산

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시정하여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 시정 요구한 것 국회에 보고하셨어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저희가 조폐공사 측에 시정 요구를 했는데 조폐공사에서는 화폐를 찍어내고 여권이라는 특수한 물건을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노무비하고 동등하게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감사원에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마는 일부는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일 위원 조폐공사 쪽의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적어도 정부는 법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에 위반된 사항이 국회와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으면 올바로 시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시정된 내용이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예만 들어보았는데 앞으로는 서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적이 되면 이것이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항상 반복적인, 의례적인 지적이 있고 그것을 그냥 지나가고 하는 식으로 하면 이 위원회를 왜 열어야 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 반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박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위원 김부겸 위원입니다.

차관님,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라크 무장단체에서 우리 프리랜서 사진작가를 통해서 인편으로 보내온 소위 협박성 비디오테이프의 진위 여부는 확인하셨어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신문에 난 정도의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김부겸 위원 이것이 혹시 실질적으로 제2, 제3의 우리 교민이라든가 혹은 우리 파견군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그 정도 대응해서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정부당국에서는 일종의 심리전을 하는 협박용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더 수집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김부겸 위원 그저께 저희들이 여기서 한중 간의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차관님께서 협상을 하실 때 중국 정부가 쌍방의 책임을 합의문에 명기하자고 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못 받겠다, 그래서 구두 양해로 갔다, 중국은 말하자면 외교적으로 양보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국이 구두 양해 사항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큰 외교전략에 말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중국 측이 외교부 홈페이지 사건처리 과정이나 이번에 구두 양해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분명하지 않고 모호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점을 다시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행동으로 어떻게 나올지, 다시 말씀드리면 교과서라든가 여러 가지 출판물, 또 홈페이지에 지금 고구려사는 한민족사의 일부라고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손을 대지 않도록 저희가 중국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행동을 보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했다는 말씀이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렇습니다.

○김부겸 위원 중국이 노리는 대로 학술대회 정도로 가버린다면 저쪽에는 지금 연구자도 많고 축적된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우리 국내에는 열 분 내외의 전문 연구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동 학술대회에 갔을 때 이런 정도 가지고 대응이 가능하겠어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우려하시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구려연구재단이라는 것을 정부 지원으로 설립을 했고, 연구하는 박사들의 숫자가 불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고대부터 중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사가 있거든요. 한사라든가 삼국지, 당사, 송사, 명사 이런 데에 전부 고구려사는 한국 역사의 일부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중국이 어디까지 비틀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저희가 대응하겠습니다.

○김부겸 위원 차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중

공동 학술대회가 열리는 장에 북한 학자가 초청되어서는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없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북한에는 고고학적 발굴부터 시작해서 꽤 많은 고구려에 관한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 역량을 초기의 논리싸움에 이용할 수 있는,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과거에 사회주의국가권이었기 때문에 현장 접근이 안 되어서 고대사, 특히 고구려사를 공부하신 분이 없다는 것은 엄연한 우리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에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북핵 6자회담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과 낙관적 전망이 다 나오는데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미국 대선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안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차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한마디로 낙관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4차에서 어떤 돌파구가 열리기를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외교통상부의 인력이 부족하다, 우리와 국가 역량이 비슷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관계되는 자료를 철저히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통상부가 인력 운용에 문제가 있다, 소위 고위직이고 또 본부 근무요원이 너무 많은 데 비해서 실질적인 해외교민이나 통상업무를 맡아야 될 현장의 인력은 너무 부족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국정감사 때 정확하게 따지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교부가 행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어서 자체 본부감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아직도 잘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이 또 하나 행정부의 제 식구 감싸기 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또 외교업무의 특성상 감사업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데가 외교부 본부일 텐데 이런 데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문제도 국정감사 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예, 말씀하세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런 지적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저희가 신임 감사관에 감사원 국장을 영입했습니다. 외교부 감사관은 외교부 직원이 아니고 감사원 출신입니다.

○김부겸 위원 그런데 과거에 보면 공무원들 내에서 스스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 감사관 한 분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기구 분담금 문제인데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국회의 예산권을 침해했다든지 그런 지적은 옳지만 사실상 국제기구에 우리가 분담금을 안 내고 버틸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김부겸 위원 사실 미국 같은 나라는 안 내고 버텨도 나중에 커버할 방법이 있지만 우리로서는 그럴 방법이 없잖아요. PKO 분담금을 무려 375억씩 체납해도 우리한테 부담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유엔으로부터 질책이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거기에는 분담금을 체납해도 이자를 물지 않기 때문에 금리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역시 분담금을 체납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김부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내년 예산에서 다 해야 된다고 기획예산처에 요구하실 작정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복잡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담금이 3년 전에 갑자기 1%에서 1.8%로 올라서 80%가 올랐습니다. 그 오르는 율이 내년에 가면 다 끝나거든요. 내년부터는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제기구 분담금을 지출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 같아서…… 어차피 좀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회의 여러 가지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획예산처를 설득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 부분은 기획예산처가 저희와 의견이 다른데요. 국제기구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데 조금밖에 안 내도 되는 기구들로부터 전부 체납의 요구를 받고 질책을 받을 것

인지, 아니면 PKO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 3배, 4배가 큽니다. 저희가 거기 한 군데만 체납하고 다른 데는 다 내는 것이 좋은지 그런 선택의 문제인데 저희는 분명히 PKO 하나만 체납하고 나머지는 다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는 미리 예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체납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외교부 입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위원 차관님, 이런 문제는 외교부 입장이 옳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토론에 부쳐서 국제신뢰를 자꾸 높여나가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곳곳에서 빚쟁이라는 오명을 덮어쓸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설득을 하셔야지요. 만날 이렇게 지적만 받고 넘어가실 일이 아니잖아요. 국정감사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정확한 자료를 놓고 저희들을 설득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해마다 외교부에서 출연하는 약 이백몇억에 이르는 재외동포재단 출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국제교류기금에 있는 것을 전용하거나 빌려 쓰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국제교류기금 중에서 현재 재외동포재단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이야기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김부겸 위원 그런데 아까 권인혁 이사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잘 하고 있다는 해외박물관에도 가 보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한국 홍보가 된다고 보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인근에 있는 일본관과 비교해 보았더니 구석에 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전시물 가지고는 우리가 정말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국제교류재단의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영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각종 기금을 만들고 재단을 만든 이유는 과거에 이것을 외교부라는 한 틀이 다 갖고 있다가 업무의 속성이라든가 전문성 면에서 이렇게 움켜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꾸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전부 다 과거에 외교부의 업무에 속했던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재외동포 업무라든가 KOICA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외교부가 직접 다 하던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김부겸 위원 그렇게 특화했을 때는 그만큼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을 발굴해 줘야지요. 2000억씩 기금 쌓아놓아서 뭐 합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이자율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데요. 이자율이 너무 갑자기 낮아져서 아주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은 외교부의 업무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국제교류기금을 출연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이것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매년 한국에 인맥을 갖고 있던 재단이나 대학에서만 이 기금을 독식해서 쓰는 것이 아닌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나중에 국정감사 때 따지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렇게 보수적인 기금 운용을 할 바에는…… 아까 기획예산처에서도 이것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가 나왔었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그래서 지난 2003년까지 기금을 없애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을 모두 다 인식을 하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 쪽에서, 외통위에서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다시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김부겸 위원 존치시키기로 겨우 결정이 났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한번 혼이 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왕에 해왔던 일에 대해서만 집착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새롭고 다양한 영역이 있고 거기에 이 예산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쓸 자신이 있다는 적극적인 설득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부겸 위원 정기국회 때 뵙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김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외통부에서 영사국 업무를 3D업종이라고 부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과거에는 그랬지만 요새는 너무 중요해져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예산과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영사업무 인원이 일본의 경우는 98명인데 우리는 5명이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권영길 위원 예산과 인원을 확충해서 재외국민 보호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BIT협정에 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충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지금 BIT협정이 중단되어 있습니까, 협상이 재개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BIT협정은 스크린쿼터에 묶여 가지고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겠지요.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 문제가 해결되면 한미 BIT협정이 재개될 것이다…… 스크린쿼터 문제를 두고 지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부겸 위원님께서 북핵 회담 문제에 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차관께서는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시기와 내용이 다 그렇습니까? 9월 말에 협상이 다시 열리기로 되어 있었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9월 말 이전에 제4차 6자회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임채정 위원장, 박계동 간사와 사회교대)

○권영길 위원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한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열릴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소위 6자회담 산하에 있는 실무그룹회의를 저희는 8월 중에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이미 힘들어진 것 같고, 9월 6자회담 직전에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전보다 덜 낙관적이 되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내용도 지난번 3차 회담에서 실질적으로 협의에 들어간 좋은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미국이나 우리나라, 북한이 개진한 입장에 있어서 4차 회담의 접근을 기대하기에는 차이가 너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저도 또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국회에서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한 번 묻겠습니다.

북한이 핵시설 동결에 대한 반대급부로 가장 얻고 싶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지금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에너지하고……

○권영길 위원 200만 ㎾에 대한 에너지 지원……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그다음에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의 삭제, 그다음에 대북 경제 제재·봉쇄 해제……

○권영길 위원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 북한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체제 보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누차 이야기해 왔던 테러 지원국, 즉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선제공격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 문제는 권 위원님 말씀을 존중합니다마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북한이 작년에는 이런 선제공격 우려를 제일 중요한 것으로 내세우면서 미국으로부터의 확보, 그런 데 대한 우려 해소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한동안 내세웠다가 작년 중반 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거둬들이고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내세웠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희도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선제공격에 대한 우려를 조금 해소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권영길 위원 지금 북한이 과거에는 선제공격을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다가 세 가지를 내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전략적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전략적 입장보다는 협상의 택틱(tactic)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변화되지 않았나……

○권영길 위원 협상전략이 바뀌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협상전략이 상황에 따라서 변경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미국의 선제공격뿐만 아니라 북미 간 관계를 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가장 중요시해 왔거든요.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 북미 간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북한은 최근까지 안보문제는 남북한 문제가 아니고 북한하고 미국 사이의 문제라는 입장을 양보 없이 취해 오다가 우리 측 노력의 결과로 최근 군사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조금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직도 안보문제는 미국하고 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바뀐 것이 아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방향은 좀 바뀌는 것 같은데요, 본질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사실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권영길 위원 이것은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미국 측에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 원문인데 그것은 생략하고요.

미국 측에서는 한미 간에 문제가 있다, 단순한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아니라 양국 정부 간 상호 신뢰와 존중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어떤 뜻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이름은 안 들먹이고 "한국 대통령의 전략적 비전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저희는 미국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미국 정부가 얘기하는 것하고 구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학자들의 그런 얘기도 최근에 많이 수그러들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제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핵심은 미국의 요구, 미국의 주장에 한국이 동의하는 것이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것은 분명히 반대하고 주도적 역할을 할 때만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다고 봅니다.

오늘 요약된 보고 4쪽, 5쪽에 FOTA 회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기지를 장차 2단계에 걸쳐서 오산-평택과 대구-부산을 축으로 하는 2개의 허브로 통폐합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용산기지 이전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구-부산을 축으로 하는 2개의 허브, 이것도 합의된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오산-평택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부산을 한 축으로 하고 오산-평택으로 해서 2개의 허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오산-평택은 주로 용산기지하고 2사단 쪽을 수용하게 될 것이고요, 기지들이 많은데 나머지 쪽은 다른 데로 하게 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이전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서명 내용이 그런 것이지요? 그 근거를, 이전을 요구한 측에서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라고 정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었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권영길 위원 그런데 독일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공항 영역 내에 미군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지 이전은 독일에서 요청했습니다. 이미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독일은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그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저희가 파악한 것은 독일기지 경우도 같은 원칙이 적용됐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면 정부가 몰랐던 것입니까, 거짓말한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 부분은……

○권영길 위원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전부 부담한다, 왜? 이전을 요구하는 측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이전에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공항 영역에 있는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은 독일과 합의된 것이고, 그 합의 원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다른 경우에는 그런 관례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권영길 위원 독일 예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미군기지 이전을 요청한 쪽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가 아니라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다른 대부분의 경우가 댔고, 그 한 곳만 예외라면 관례로 보셔야지요.

○권영길 위원 아니지요.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그다음에 용산기지 이전은 물론 우리가 외형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 FOTA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국방 관계지만 묻습니다.

본질적으로 미군기지 이전은 이른바 GPR,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그 부분도 재고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용산기지 이전을 우리가 요구해 왔지만 본질적으로 용산기지와 의정부 동두천 그다음에 서부전선에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것이 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용산기지 이전비용에 관한 부분도 재검토되어야 되겠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GPR 관련되어서 움직이는 부분이 2사단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전비용을 안 뭅니다. 미국이 물고요. 용산기지 이전은 벌써 90년대부터 저희가 요청해 왔기 때문에 GPR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는 것이……

○권영길 위원 동두천 문제도 관계가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부겸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이라크파병 문제, KBS에도 보도되었던 '검은 깃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그 테러단체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대책도 수립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아닙니다. 저희도 기사에 난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라크의 테러단체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이합집산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조차도 명단을 갖고 있다든가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든가 어느 테러단체의 속성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이 뉴스로 들어오거나 저희 정보에 잡히면 그때부터 파악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권영길 위원 파악했는데 정보 부족으로 아직 실체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저희도 신문에 난 정도밖에……

○권영길 위원 보도 수준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지난번에 김선일 사건도 일어났는데 보도 수준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아니요. 단체가 지금 수십 개 내지 수백 개로 추정되고 이합집산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걸고 나오면 그때부터 파악하는 것이, 미국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저희만 정보……

○권영길 위원 현지 대사관을 통해서 신뢰성을 확인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확인한 결과 보고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요.

○권영길 위원 현지 대사관에서도 잘 알겠지만 저도 현지진상조사를 한 국회조사단의 일원으로서…… 전달한 조성수 기자는 한국정보원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까지 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아마 유일하게 팔루자에 있는 무장단체와 접촉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갖지 못하는 정보를 갖고 있고, 우리 정보기관에서는 접촉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무장단체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비디오테이프라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한국인 그다음에 군대에도 테러를 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이라크 내에 있는 교민은 물론이고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의 우리 교민에 대한 긴급지시가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아직 파악 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보도가 언제 되었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오늘 신문 봤습니다. KBS는 어저께 보도가 됐고요.

○권영길 위원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구려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저께 보고하실 때 정치문제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제기하지 않겠다고 차관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관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중국이 고구려사가 한국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할 것인가 그다음에……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모호하다고 저희가 제기하고 있고요, 정치화 안 하겠다는 얘기는 상대편이 먼저 그 문제를 왜곡하지 않겠다는 얘기이고 왜곡이 일어나면 반드시 정치화하고 그것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 위원 중국이 고구려사가 한국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지금 중국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교과서라든가 많은 데서는 고구려사는 한민족사의 일부라고 그대로 놔두고 있고 홈페이지는 손을 댔다가 현대사만 놔두고 다 지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모호한 입장을 취해서 저희도 그것을 따져 묻고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한미 BIT 협상에 관한 부분은 서면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고, 용산기지 이전에 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委員長代理 朴啓東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순서 변경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성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장영달 위원으로, 다음 김문수 위원 질의순서에는 전여옥 위원으로 이렇게 상호간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장영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영달 위원 장영달입니다.

오늘이 결산회의인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권발급수수료가 초과되어서 예산증액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로 여행객들이 많이 증가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해외여행객이 급증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매년 상당히 놀랄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급증하고 있습니까? 주로 중국 쪽입니까, 다양합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우선 인근 지역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 측이 특히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영달 위원 여권발급수수료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급증하고 있군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대충 지난해에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여행객이 늘어날 경우에는 어차피 또 증가됩니다.

○장영달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부겸 위원께서 "해외 유엔분담금을 체납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냐? 왜 안 갚느냐?" 이런 요지로 말씀하셨는데 7월 말에 제가 유엔본부에 가서 정무담당 사무차장하고 오랫동안 얘기해 봤는데, 그리고 우리 외교부 측에서도 우리가 분담하는 만큼 유엔에 우리 요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지적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유엔에 과장급은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과장급이 몇 명 있습니다.

○장영달 위원 우리 외교관 중에서?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외교관 중에는 없고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장영달 위원 그러면 우리 외교부하고 같은 통로를 갖고 일하는 사람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아니지요. 국제기구에 파견되어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장영달 위원 물론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외교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장영달 위원 그러면 해외동포도 있을 수 있고……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우리 국민이지요.

○장영달 위원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그렇습니다.

○장영달 위원 과장급으로는 몇 명 있는데 국장급은 아직……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국장급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를 본부에 1명 정도……

○장영달 위원 아무튼 제가 갔을 때 유엔대표부 대사께서 그러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분담하는 만큼 유엔이 우리에게 할애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저희가 1%를 냈던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충 수준이 맞았는데요,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유엔에서도 저희한테 채용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장영달 위원 다음에 권영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6자회담에 대해서 낙관하지 못한다, 저도 7월 말에 미국을 가보고 또 북한의 유엔대표부 박길연 대사도 만나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난번에 베트남에서 탈북자들이 400여 명 입

국했는데 저는 상당히 미숙한 자세를 취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요란하게 400여 명씩 오면 북한으로서는 기분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대사하고도 워싱턴에서 조찬하면서 오랫동안 얘기해 봤는데 지금 6자회담의 주제는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정부의 관심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많이 돌아가 있는 것처럼 느낌을 받았어요.

또 박길연 대사하고 얘기해 보면 북쪽에서는 '아, 만약 미국이 핵 문제를 합의하더라도 인권문제를 또 하나 제기해서 이 회담은 끝없는 회담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회담은 끝없는 회담이 되는구나, 그래서 낙관하기 어려운 회담이 되어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퍽 우려하는데 이것은 한미 간에 전략·전술상으로 미국에도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고 북한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법이 뭐겠는가 하는 것을 외교적인 채널을 통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답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황장엽 씨가 미국을 방문했는데 우리 국가가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황장엽 씨가 미국을 방문한 결과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면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남북 관계도 있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도 있기 때문에요, 그들 사이의 조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황장엽 씨 방미가 남북 관계에 결정적인 어려움을 가져왔다는 증거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영달 위원 일본을 조만간에 방문할지 모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황장엽 씨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입장이지요. 그렇지요? 그냥 보통 국민과는 다르지요. 또 우리가 북한하고 화해협력 정책을 취해 감에 있어서 황장엽 씨가 어떤 언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기분도 거스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남북이 평화통일로 가야 되는 것이 민족적인 과업의 대전제라고 봤을 때 황장엽 씨 본인도 개인적으로 북의 체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 개인의 기분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국가정책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또 어차피 우리가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취하는 것은 민족공동체 전체의 자유와 평화를 확보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장엽 씨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지장이 오는 것은 꼭 민족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 황장엽 씨는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특수관리대상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황장엽 씨가 '나는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싶다', 누가 초청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본인이 할 일도 아니고 또 정부로서도 그것을 그냥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치에 꼭 부합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 본인도 민족 전체의 이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해서 합당한 행동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일본 방문 같은 경우는 미국과는 또 달라서 우리 남쪽으로서도 그렇고 북쪽으로서도 대단히 민감한 요소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장엽 씨 본인이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좋고 그것이 어려우면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데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실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문화예술협력 관계로 산둥성을 한 3일간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가 보니까 관광객이 하도 많이 오니까 거기에서 설명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가 관광객들에게 '장보고 대사 아버지는 중국 사람이고 장보고 대사는 신라인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삼국유사에 의하면 그렇다는 식으로 삼국유사 탁본을 장보고 대사 옆에 붙여 놨어요. 제가 와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삼국유사에 장보고 대사의 아버님이 중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기록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장보고 대사는 신라인으로 완도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분의 아버지는 중국 사람이다' 또 '장보고 대사가 신라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제사를 위해서 법화원이라는 절을 만들어 놓고 신라인들이 왕래하게 했는데 그때 마침 일본의 승려 한 사람이 왔다가 돌아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것을 구출해 준 역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거꾸로 '장보고 대사가 위기에 처해서 일본 사람이

구해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역사 왜곡이 고구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가 보고 이번에 가 봤는데 그 지역을 대대적인 문화관광지로 조성해요. 중국의 자금성 규모 비슷하게 조성을 해요. 그래서 관광객을 받아들이는데 장보고 대사 기념관까지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문화관광부장관한테는 그 사실을 전달했는데 산둥성 지방정부나 이런 데하고 그 왜곡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외교안보연구원 정원의 31%나 되는 27명의 고위직이 대기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본부대사 형식으로 되어 있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장영달 위원 이것은 불가피한 것입니까, 과다한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그분들이 외교안보연구원 소속이 아니고 본부 소속인데 거기에 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불러들여야 합니다. 가급적 빨리 불러들이겠습니다.

○장영달 위원 예산의 집행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에서 지적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빨리 시정하겠습니다.

○장영달 위원 끝으로 황장엽 씨 문제, 또 미국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전체 정책 수행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집행하고 특히 미국과 깊은 대화가 필요한 국면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啓東 장영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田麗玉 委員 지난해 12월에 외교부의 한 직원이 내부통신망에 외교관의 관행적 비리를 고발한 사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차관과 박성웅 감사관이 철저히 감사한 뒤 관련자를 문책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내겠다고 했는데 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田麗玉 委員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공관에서 그랬습니까? 또 이들의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서면자료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한 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대상자 중에 실질적으로 비리를 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한 양의 벌금을 추징했습니다.

○田麗玉 委員 지금 A대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 나왔는데 누구였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것은 문서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田麗玉 委員 그때 당시에 내부통신망에서 나온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작당을 해 가지고 공금으로 점심을 먹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포자기한 엘리트 외교관의 한탄도 들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서면보고도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또 다른 나라 공관에서의 비용 처리하고 우리나라 공관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실비 영수증 처리를 못 하게 한 점이 하나의 큰 진전사항이고, 차이가 있는 것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사건에서 제일 아프게 느꼈던 것이 대사들이 막말로 밥장사를 한다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요리사를 대사관에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리사가 만찬 재료도 사고 요리도 하니까 대사 내외가 일체 현금을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케이터링을 하면 됩니다. 호텔에 맡겨서 호텔에서 와서 완전히 다 해 주면 일체 돈을 만질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저희는 한식당이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케이터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소득이 1만 불인데 3만 불 되는 나라를 흉내 내서 요리사를 보내 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사 부인이 장을 봐야 되고 돈을 만지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하는 많은 고민 끝에 결국은 영수증 외에는 1원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상당히 엄격한 정책을 취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썼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해결방법은

안 되고 둘 중 하나로 가야 됩니다. 케이터링으로 가든가 요리사를 보내주든가 해야 됩니다.

○田麗玉 委員 지금 케이터링 말씀을 하셨는데 케이터링은 전 바브라 부시 여사도 한 번 케이터링 했다가 크게 당한 것이 자서전에 나올 정도로 상당히 고비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선진국들의 경우는 우리나라 대사관들에서 파티할 때 하고 다른 게 일단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그런 다음에 비용을 사후에 보고하면 사후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먼저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선진국의 경우는 사후·사전이 없지요. 일체 돈을 대사한테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전에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재료를 사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대사 부인이 동료 부인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田麗玉 委員 지금 대사 부인 중점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은 대사 부인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대사관의 전반적인 관행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A대사라고 알려진 분이 평소에도 골프를 즐겼고 여러 가지 지탄이 있고 사내에서 제보가 있었다, 물론 그것이 A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사감을 가진 어떤 직원의 얘기였다는 얘기도 들립니다만 문제는 실제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田麗玉 委員 A대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감사가 됐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이미 퇴직한 대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벌금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법적인 조치가 어려웠습니다.

○田麗玉 委員 그런데 법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 벌금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밖의 페널티가 더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데 왜 벌금만 내면, 토해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외교관은 명망과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은 일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 전반적인 처리과정하고도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저희는 외교관들이 대사가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번 혁신 아이템 중의 하나로 대사 적격심사를 강화해서 한 20~30% 정도 부적격을 하기로 내부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田麗玉 委員 그러면 부적격의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예를 들면 외국어시험을 봐 가지고 거기에서 떨려난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평소에 업무 달성도라든가 업무의 책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 붙이고 유보했다 이러는 것으로 봐서 말만 이렇게 하지 실제적으로는 다 넘어가 주는 것은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아닙니다. 저희가 외부 요인을 50% 모시고 있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관장 적격심사 때 4분의 1이 부적격이 됐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田麗玉 委員 그리고 이 당시에 '공금을 작당해서 먹는다' '우리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아래 직원들의 자포자기 또 그 절망감을 알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작은 부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재단할 때 그 조직에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영수증 처리를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도 있을 거고 또 선진국과 달리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위조 영수증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신용카드로 한다든가 몇 가지의 구체적인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저희가 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우리의 동료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가혹한 법규를 마련해서 재외공관에 보내놓고 있습니다.

○田麗玉 委員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매년 발간되도록 되어 있는 감사사례집은 발간이 됐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田麗玉 委員 그러면 감사사례집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평화포럼의 지원 문제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남북관계의 굉장히 상징적인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인, 석학들을 모셔다 놓고 했습니다만 2001년에 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계적인 분들이 오셨습니다만 2003년 10월에는 세미나의 주제나 인원이나 많은 것이 축소됐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외교부는 상당한 돈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공 근거는 무엇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고 외교적으로 상당히 중요성이 있고 특히 남북관계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초청 비용하고 세미나 비용 같은 것은 저희가 외교역량강화 예산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田麗玉 委員 외교부가 지원한다 하더라도 2003년에 참석하신 분을 보면 민간행사 정도에서 이것을 해야지 외교부가 거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초기의 초청대상자들은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동안에 그분들이 못 오고 격하됐기 때문에 그런 유감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田麗玉 委員 그럴 경우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하자면 초기에 왔던 그 정도의 레벨에 준하여 외교부의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민간단체라면 당연히 다시 받든지 해야지…… 모든 세미나나 회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 외교부가 그 기준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환수는 현실적이 아니고요. 그다음 해에 좀더 조심하도록 하고 예산을 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田麗玉 委員 제가 보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회의가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인사가 오고 사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체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외교부하고 사이가 좋은 민간단체면 뭐든지 받는다…… 그리고 민간행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사에만 유독 이렇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외교활동에 많은 돈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서도 상당한 비용이 외교활동비로 지출되었는데 전체 외교활동비 가운데 중국 외교활동비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곧 알아서 보고하겠습니다.

○田麗玉 委員 거의 50억에 가까운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외교부도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런 것이 외교부 자체 내 컨설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를 지출했는데 과연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고구려사 '왜곡'이 아니라 '강탈'인데 대중 외교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중국, 일본, 미국 세 나라가 우리하고 경제교역 규모나 외교,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고구려사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처럼 유감스러운 사례도 있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교역이 이미 700억 가까이 될 예정이고 지금 추세라면 200억 불의 무역흑자를 볼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런 노력의 결과의 일환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북한 핵 문제도 비록 중국이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내놓을 입장에 대해서 북한에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50억 원의 지출을 계량화하기보다는 국가의 전략이라든가 안보, 경제적인 큰 틀 이런 면에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田麗玉 委員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저는 돈을 적게 쓰자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써서 결과가 좋다면야 저는 50억 아니라 100억을 써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가 일종의 교역에 있어서 선발대로 삼았던 것은 자기 나라의 역사, 문화에 대한 하나의 선호도, 우호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문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외교부의 대중 외교 활동비에 있어서 들인 것보다 아웃풋이 매우 부실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啓東 전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崔炳國 委員 최병국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외교통상부 최영진 차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국익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치하와 감사하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북핵과 관련해 가지고 6자회담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회담의 진전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이 회담을 하면서 가끔 북한 정권이 그들의 '정권 안정과 체제를 보장해 달라'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측에서는 먼저 핵을 포기하면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 또 우리 정부에서도 체제 보장을 해 준다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체제 보장'의 뜻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 준다, 북한 정권의 안정을 보장한다 이럴 것 같으면 이제 통일은 하지 않겠다는 기조가 깔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체제 보장은 북한 스스로가 많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군사적인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안전 보장이지 어떤 체제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체제는 북한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崔炳國 委員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진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마는 북한의 노동당규약 전문인가에 보면 북한의 현재 당면과제는 북한의 혁명 기조를 강화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한반도 전체의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하는 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 체제라고 하는 그 자체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남북한 전체를 통합한 한반도 적화입니다. 체제를 보장해 준다는 그 자체는 소위 북한의 대남적화활동을 보장해 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차관님은 학자이시니까 그런 논리는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간과해 가지고 나중에 협상을 해 놓고 난 후에 '대남 적화활동하는 것, 우리 체제 보장해 주겠다고 6자회담에서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의 당면과제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적화통일이다, 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연구해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대책 같은 것 갖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유념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북한이 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와 국력의 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적시성이라든가 현실성이 있었던 적화통일은 이제는 사실 현실성은 없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내부에 대한 행동은 그 부분을 충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崔炳國 委員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남북분단이라는 것은 단순히 국력차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전 같은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월남도 옛날에 그런 것 안 봤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대단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확실히 할 것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 북한 정권의 안정을 보장해 주겠다……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나 가지고 붕괴되더라도 우리가 북한 정권을 보장해 주고 주변 6개 나라가 다들 보장해 준다고 하면 우리는 통일 안 하고 분단을 고착화시키겠다는 내용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논리를 개발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체제하고 북한의 안전하고는 북한 스스로도 많이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더 유의하겠습니다.

○崔炳國 委員 나중에 외교통상부의 업무에 관한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외세라고 하는 것하고 저쪽에서 외세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북한은 주한미군을 외세라고 하고 우리는 다른 의미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인데 영사관에서 여권 발급을 하는데 15만 4191개나 잘못 발급됐다는 지적을 받았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崔炳國 委員 15만 개나 잘못되었는데 아직까지 회수해서 재발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것이 아마 그 밑에 비밀번호를 넣는 과정에서 숫자가 하나 빠져서……

○崔炳國 委員 그렇습니다. 주 일본 한국대사관

이 3만 2000개,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3만 1000개, 경북이 3만 1000개, 충북이 2만 3000개 해서 전부 15만 개의 여권이 잘못 발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외국에 가면 허위 여권이 되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기사도 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됐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실질적으로 피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1차적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고, 나올 경우도 2차로 확인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崔炳國 委員 외국에 가는 사람들이 공항이나 항만에서 우리 여권이 신뢰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고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崔炳國 委員 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건입니다마는 사증 발급과 관련해서 잘못 처리했다고 해서 공무원 9명에 대해서 통지가 왔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崔炳國 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인사조치,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崔炳國 委員 또 아직까지 정식 여권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정보를 입력하기 전의 여권을 공백 여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연간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고 있군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崔炳國 委員 금년도에는 115억 3700만 원, 작년에는 151억을 구매했는데 여권의 단가를 노임단가를 잘못 계산해 가지고 2년간 72억 정도를 더 많이 지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기관에서 국가기관에 돈 주는 것이 별 것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거래 관계는 국가기관 간이라도 사경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조폐공사와 이미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崔炳國 委員 세입이 당초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많이 징수가 되었는데 여러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권발급수수료가 초과 수납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초과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에 수치가 죽 나옵니다마는 99년에는 60% 이상이 초과되기도 하고 작년도에도 212억이나 초과해서 35%가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국가 전체에서 보면 전체 초과 징수된 액수가 276억 원인데 그 액수의 76.8%인 212억이 외교부입니다.

이것은 각도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수입대체경비는 국가에 반납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그 사업에 돈을 충당할 수 있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것은 저희가 못 쓰는 돈입니다.

○崔炳國 委員 그 돈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쓸 수 있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저희 외교부에서는 못 쓰고 국가에 전부 반납합니다.

○崔炳國 委員 아닙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나도 예산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수입대체경비는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소 책정하더라도 나중에 경비가 많이 들면 다시 초과지출 승인을 얻어 가지고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임의대로 적게 하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많이 생기더라도 좀 적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형식으로, 이런 쪽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내년부터 시정하겠습니다.

○崔炳國 委員 이것 시정하세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수입이 과소하게 책정되는 것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세출하는 데도 항목이 2개가 있습니다.

여권업무와 관련해서 세출예산에 보면 여권발급 수입대체경비 세항이 하나 있고 여권과 기본사업비라는 세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두 항은 같은 업무입니다. 그리고 세입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이 세입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것이니까 통합을 하세요. 예산담당관한테 얘기해 가지고 통합해서 예산도 투명성 있게 하세요. 같은 항을 둘로 나누어 놓고…… 그리고 지금 세입 가지고 2개 항을 하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알겠습니다.

○崔炳國 委員 마지막으로 국제교류기금 문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는 한국문화와 국외홍보 활성화사업에 38억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해외

한국학 지원사업에 14억, 외교통상부는 민간예술단체 해외공연지원사업 17억이 있습니다.

옆에 계십니다마는 국제문화교류사업은 전부 다 국제교류재단에 넘겨줘서 거기에서 같이 통합하도록 하면 되지 직접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을 그쪽에서 바로 편성하면 되지 같은 업무를 하면서, 국제교류재단도 있는데 각 부처에서 나누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통합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지금 정부 자체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예산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벌써 시작했고 3년 내면 거의 완성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분야도 저희가 같은 원리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炳國 委員 차관님은 예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해 놓으면 역시 방만한 예산은 로스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 뭉치로 해서 교류재단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啓東 최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본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화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외동포 관련 예산입니다. 재외동포 관련 예산이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각 정부부처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각국의 현지에 가서 보면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도 우리 국가에서 동포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는 하는데 도대체 통일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어서 산만하니까 차라리 한 곳에 집중되어서 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간도 좀 제대로 갖추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2003년도 부처별 재외동포 관련 예산을 보면 재외동포재단 이외에 외교통상부는 12억, 교육인적자원부가 317억을 쓰고 있고, 문화관광부가 14억, 통일부가 2억, 법무부가 2300만 원, 국가보훈처가 4000만 원해서 재외동포재단 이외에 대략 346억 정도의 부처별 재외동포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외동포재단 같은 경우에 재일민단 지원하는 84억 원을 제외하면 2003년도 사업비가 약 1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재외동포재단의 설립 취지도 그렇고, 사업 방향도 그렇고, 전문성도 그렇고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재외동포재단으로 통일되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정부 내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제일 중요한 것이 한글학교 때문에 교육부 예산이 많은 부분인데 그것하고 저희 외교부하고 일을 합칠 수 있을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그쪽 부분을 관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화영 위원 이것은 앞으로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예산을 잘 모아서 예를 들어서 종합민족교육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면 훨씬 프로그램도 좋아질 수가 있고, 인건비도 덜 들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다 나가셔서 느끼셨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너무 산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외교통상부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개선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재외동포센터 건립이 무산되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이광규 지금 국내에서 재외동포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모금하는 것도 법에 안 맞고, 또 수도권 이전문제 이런 것과 겹쳐 가지고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이화영 위원 이 문제도 존경하는 이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700만 재외동포들이 앞으로 모국에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소화해내고 또 자기들의 공간이 모국에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진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이광규 수도권이 결정되면 정부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권 내에 정부부처 관련 건물의 건립은 일체 중지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은 그것에 따르는 것이고, 만일 새 수도권으로 옮겨져서 여건이 조성된다면 저희들은 만들고 싶은 의사가 있습니다.

○이화영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재외동포들이 재외동포재단의 초청으로 오면 대개 어느 공간에서 일정이 소화가 됩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이광규 한 삼사십 명씩 오는 것은 대개 조금 괜찮은 호텔 같은 데에서 묵게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위원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이광규 예,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화영 위원 이런 센터가 있으면 비용도 절감하고…… 센터에 우리 민족 프로그램도 좀 넣고, 역사관 같은 것도 만들고, 또 그런 것을 순방하는 코스도 만들고, 숙소도 있고 그런 식의 센터는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이광규 여건이 허락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화영 위원 그리고 이 문제와 연계해서 차관님께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데 지금 외교정보센터도 못 짓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것은 올해 이미 착공되었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화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광규 이사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나고야에 갔는데 나고야 지역은 아주 특수하게 민단과 조총련의 화해 분위기가 비교적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민단과 조총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한나라당의 고진화 위원과 제가 같이 가서 프로그램을 수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총련계 쪽에서 여러 분들이 나와서 저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자기네 학교를 좀 살려 달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조총련계 민족학교 출신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모로 애를 쓰고 있던데 한 1000여 개에 이르는 학교들이 폐교 위기를 맞고 있고 또 일본의 우경화 분위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난을 겪고 있던데 혹시 재단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이광규 그것이 우리 재단의 힘에는 벅찬…… 조금 정책적인 차원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월 15일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조총련이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 5년 전부터 북한에서 조총련계 사업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끌어갔기 때문에 조총련계 은행이 전부 부도가 났었는데 6·15선언이 나오고 나서는 더욱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쪽에 많이 다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사신을 보내면서 '우리 학교를 좀 도와달라' 이런 것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 사이, 북한과 일본이 수교하기 전까지가 굉장히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것을 아주 높은 차원의 정책으로 밀어서, 그렇다고 조총련 학교를 전부 민단 학교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민단 학교로 들어오게 되면 일본 교육령에 따르기 때문에 일본 말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지금 특별한 사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조총련 학교에서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다 떼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국기 올리는 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살려 가지고 민단도 아니고 조총련도 아닌 진실한 재일한국인으로서의 살 길을 모색해 줄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찬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재단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아주 고차원의 정책, 외무부나 더 높은 차원, 혹은 국회 같은 데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요 몇 년 사이에 아주 획기적인 정책을 쓰면……

조총련 학교가 생긴 것이 1954년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사이가 나빴을 때 남일이 와서 남일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대 가지고 조총련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몇 년 사이가 조총련 학교를 껴안고 재일동포들이 재일동포답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아주 좋은 찬스라고 생각해서 국회에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의 부탁입니다.

(임채정 위원장, 박계동 간사와 사회교대)

○이화영 위원 일본 현지의 분위기는 지금 이사

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분위기가 완연합니다. 조총련계 학교의 관계자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는 하나된 조국에서 관점이 어떻든 간에 학교를 살리는 쪽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는 취지들이 너무 완연하고, 이데올로기 부분도 상당히 많이 탈색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구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외교부가 해외공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개 그 내역을 보면 오페라를 지원한다든가 좀 클래식한 쪽에만 있고 요즘 아주 잘 되고 있는 한류열풍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재외동포가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우수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나 모스크바도 마찬가지인데 CIS 국가 같은 경우에 우리의 좋은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방영하거나 우리 프로그램을 알리려고 하더라도 그런 단체는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 등 문화프로그램 판권이 비싸서 자기들은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문화·외교 차원의 해외공연 지원사업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러 140주년 기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10월 중에 러시아 고려인연합회가 모스크바에서 주최하는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 콘서트에 다양한 가수들이 올 것인데 한국 측에서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이 와주기를 아주 갈망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쪽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중공연 가수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그때 적합한 록그룹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화영 위원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啓東 이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성권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권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보고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원래는 결산에 들어갔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는 국가정상 간에 국제회의가 벌어질 경우에 그 행사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국가원수이고 외교부가 뒷받침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권 위원 정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2000년 ASEM이나 그리고 2005년 APEC과 같은 국가정상 간의 회의는 정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렇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성권 위원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 7월 30일 대통령령 제17691호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위원회가 규정되었고 거기에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이루어질 부산의 APEC 역시 정부가 주관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부산시가 지금 많은 부분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나 그것은 결국 부산시의 행사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그리고 정상 차원의 회의가 맞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이성권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APEC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지금 준비기획단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나 실제 2000년도 ASEM회의하고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준비가 미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0년 개최된 ASEM회의 같은 경우에는 1996년 3월 방콕 제1차 ASEM회의에서 2000년 한국에서의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96년 3월 개최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같은 해 5월 선정기준을 만들었고 1996년 6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달 개최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APEC은 준비과정이 어땠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 차이는 아마 ASEM 때는 회의장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되어서 좀 일찍 결정을 했고요. 부산은 이미 회의장이 있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권 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주관할 때는 시도 관계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행사를 준비하는 그 지방의 시의 입장에서는 일찍 결정되어야만이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이성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APEC 정상회의 준비 같은 경우는 2002년 7월 30일 그때 대통령의 요구로 준비위원회가 규정되었고 그 다음 달 준비기획단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개최지 확정은 언제 되었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보다 늦게 되었는데요.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ASEM의 경우는 회의장을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2~3년 건축기간을 저희가 산정해서 미리 결정을 했고요. 부산·제주 경합 경우는 둘 다 회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런데 2003년 8월 1일 회의 개최지 장소가 정해진 것은 1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방금 차관님께서는 회의장을 핑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지역을 선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느 지역에 유치가 될지 모르고 회의장이 있는 지역일 수도 있고 없는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는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국가적 차원으로 고려를 했을 때 없는 지역을 선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놓고서 답변하시는 것은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으로 이렇게 정상 간에 회의가 벌어질 경우에 재정적인 지원은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것은 개최도시에서 충분한 여력이 있으면 그쪽에서 하면 좋고요. 안될 경우 국가보조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지금 현재 부산시가 그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상당부분 재정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자료를 일단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싶은데 ASEM이나 APEC과 같은 국제회의가 타국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시라든지 민간재정을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국제회의라든지 올림픽이나 부산아사안게임과 같은 국제행사를 유치했을 때 정부의 국비와 시비라든지 재정지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 게 제가 오늘 일본 쪽 국회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것을 보면 1995년도 오사카에서 APEC이 유치가 되고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정부 측 예산을 보더라도 정부 예산이 국비로서 22억 엔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사카구와 오사카시에서 각각 5억 엔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역 재계 측에서 5억 엔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부를 제외한 예산 지원은 15억 엔이고 정부 측 예산이 22억 엔이었습니다. 50%가 넘는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서, 오사카는 상당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많았습니다.

일본뿐만 아니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대부분 외국에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일본과 비교한다면 오사카보다는 상대적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할 기반시설로서는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개최가 결정이 난 것은 2000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과정이 너무나 미흡해서 부산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정부 차원의 지원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지금 400여억 원 신청이 되어 있고 기획예산처하고 여러 가지 점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지금 기획예산처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우선 각 부처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전체 2598억 원 중에서 28.1%에 불과한 729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금액이라면 전체 총 예산에서 나머지 부분을 부산시나 민간이 부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산시장이 그 행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국가원수가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방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부 차원으로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외교통상부 차원으로 장관님이 APEC 준비기획단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이성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타 부처와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검토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 결산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8억 1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에 난민체류교섭을 위해서 국외여비나 업무추진비 등의 항목만 있는데 본예산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 항목이 없는 것으로 보여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7월 외교통상부는 아시아의 한 국가를 통하여 468명의 탈북자를 2회에 걸쳐서 입국하도록 했는데 현재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정부는 3만~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유엔은 10만 명 이상 그리고 탈북자 지원단체는 30만 명 안팎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남아 국가에서의 탈북자 대량 입국처럼 앞으로 해외에 떠돌고 있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가 간 교섭 등의 문제는 외교통상부가 맡아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북자 문제의 중요성에 비해서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한 부처로서의 예산편성에 탈북자예산이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탈북자 대거 입국의 경우에도 이에 관련된 예산의 사용은 본예산의 항목이 없어서 예비비로 사용한다고 봐야 할 것인데 이는 결국 결산에서 예비비의 사용증대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차관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탈북자 지원 정착금은 대부분 통일부 예산에서 나가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이번에 460명 입국 교섭처럼 특별한 경우에 교섭을 위해서 공관에서 필요한 예산 또 그분들이 3~4개월씩 장기간 체류하실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생활비 같은 걸 저희가 내기 때문에 국내 정착기금은 역시 통일부에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권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에 한해서는 통일부가 주관 행정부처이기 때문에 통일부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 유랑하고 있는 해외 탈북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입국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재외공관의 문을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두드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을 예상한다면 외교통상부가 그 업무를 주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저희가 그분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요, 거기에서 몇 개월씩 생활을 돌봐드리고 있는데 그 시설을 계속 늘리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고요. 또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산을 매번 추세에 따라서 늘려가는 것은 좋지만 주로 중국에 계신 탈북자들을 상당 부분 고려해서 늘린다는 것은 조금 비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어떤 의미에서 비현실적이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공관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저희가 소위 안가라고 부르는 주택, 저희 관할에 미치는 지역에 있는 분은 생활 보조금을 드리고 보호해 드리지만 그 외 분들은 사실 저희가 접촉도 안 되고 보호해 드리기가……

○이성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똑같은 사례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또 다른 탈북자 관련된 것을, 난민캠프라든지 그런 것을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욱더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올려서 신청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

씀드렸는데 이 점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朴啓東 이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호 위원 유선호 위원입니다.

결산 예비비 현안에 대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질의하고 이 시간은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등에서 65년의 한일협정 체결을 둘러싼 비공개 문서들이 발굴됨으로써 그 당시에 추악한 뒷거래가 있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파악되는 내용은 박정희 정권이 61년부터 65년 사이에 일본 기업들로부터 당시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았고 한일회담 회의록에 의하면 일본 측은 한국에 피해자 실태 조사 후에 개별보상하겠다고 제의했으나 한국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일괄 지급받아 국내에서 알아서 조치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외교부에서는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공개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서 관련 문서를 공개할 용의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 문제는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법부 결과를 기다려 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선호 위원 이 송사가 계속되는 이유가 외교부에서 항소해서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항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우리 혼자의 문서가 아니고 일본하고 양국 간의 문서이기 때문에요, 국제관례는 양측이 동의할 때 공개하는 것인데 일본이 동의를 꺼리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앞으로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다른 나라하고 양자적인 교섭이나 문서를 만들 때 도움이 안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저희가 항소를 했는데 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넘어서는, 또 인도주의적인 차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사법부에 가 있는 만큼 2차 심의결과를 기다려 봤으면 합니다.

○유선호 위원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양해하더라도 우리가 굳이 항소까지 하면서 일본 측 입장을 옹호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고요.

특히 역사 바로잡기나 국민들의 알 권리 또 전쟁 시의 피해당사자들이 있고 해서 지금 공개의 필요성이 상당히 제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유선호 위원 그다음에 지난 20일 열린 제11차 FOTA회의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합의가 내년 말까지 1만 2500명을 줄이기로 한 감축일정과 관련해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10월로 넘어갔다는 것인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감축규모하고 일정은 좀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유선호 위원 그리고 미8군사령부는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것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합의한 것은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2사단 관련해서 LPP,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에서는 합의를 완전히 이루었고 9월 중에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선호 위원 그리고 다연장 로켓포나 아파치 헬기 부대 등 핵심전력 감축 관련해서도 우리 요구를 밝힌 것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저희 입장은 제출했습니다마는 병력감축 문제하고 마찬가지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유선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냉전시대 때는 우리와 미군이 대북 억지력이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한 목표 아래서 일치됐고 그만큼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냉전이 허물어지고 특히 우리는 북한이 위협의 상대방이자 또 하나의 중요한 위치인 대화의 상대방으로, 이런 병행적인 입장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의 인식 차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미국 역시 9·11테러 이후 예컨대 냉전보다는 보이지 않는 테러집단에 대한 응징으로서의 여러 가지, 새로운 파트너를 구하는 데 대한 인식 차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 변화, 상황 변화와 맞추어

서 이제는 과거보다는 좀더 대등한 관계에서 우리가 주체적인 당사자가 된 새로운 한미동맹이 시급히 구축되어야 될 단계에 있는데요. 이것이 묘하게도 GPR계획과 일치되는 바람에 사실은 새로운 한미동맹 조정관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런 정황 변화를 깊이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시간을 벌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GPR계획이 엎친데 덮친 격이 되어서 오히려 한미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소지가 깊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미군 감축이랄지 또 핵심전력의 감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만만디로 천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양 정치권에서 양 국민의 정서가 급속히 멀어지지 않게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는 FOTA협정이 분명한 목표를, 예컨대 감축일정을 지연시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볼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좀더 집념 어린 목표 아래서 다음 FOTA회의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은 과거의 미국 외교는 군사적인 문제와 외교가 분리되는 양식으로 전개됐는데 최근의 미국 외교는 조금 군사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외교 역량이 대단히 강화되어야 될 중대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번 FOTA도 그렇지만 대미관계 외교에서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함께 같이 나가서 교섭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선호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미군기지가 이전하게 되는데 24일에 평택 주민들이 절대 안 된다고 집회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마치 부안사태 비슷하게 전개해서는 안 될 문제이고 이것은 또 우리의 굉장한 국익이 걸린 문제인 만큼 주민 설득을 위한 깊은 대책이 수립돼서 이것이 또 다른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새로운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됐을 때 주민의 반발이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방향으로 번질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결산 관련된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朴啓東 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계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계륜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마는 탈북자 문제, 탈북자라는 표현이 정확한지 다른 표현을 정립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탈북자 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외교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앞으로 정말 신중하게 잘 대처하지 않으면 외교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문제인 듯싶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이 다른 각도에서, 차원에서 얘기했지만 탈북자 문제는 특히 외교부가 외교관행과 형편을 잘 파악해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외교부의 전문적인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점차 이것이 중대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이번 대량 탈북자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위원님들이 베트남을 다녀와서 대단히 큰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한테 말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그 나라도 그 나라 나름대로 대단히 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교부로서는 이 문제를 더욱 중시 여기고 온당하게 전문적으로 능숙하게 처리할 방안에 대해서 항상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탈북자 문제만 본다면 주무부서가 통일부라고 할 수 있나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들어오고 나서는 통일부지만 밖에서 입국을 시키기까지는 외교부가 주무부처입니다.

(박계동 간사, 유선호 간사와 사회교대)

○신계륜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외교 문제이

니까요.

그래서 탈북 문제를 단순히 통일시켜서 똑같이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통일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탈북자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가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응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외교부가 바깥에 있는 탈북자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또 예견하고 대비함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오해되면 국가적인 외교문제로, 이미 비화됐지만, 비화될 소지도 있고 중국 같은 나라는 이미 그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해야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외교부가 외교관행과 사정들을 잘 판단해서 해야지 무조건으로 이것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편성이나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같은 일을 하고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북 관계가,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격화되고 대립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순탄하게 가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나 향후 통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주 난관에 봉착했지요.

더 큰 이유도 있지만 작게는 최근 몇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탈북자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문 문제도 영향을 준 것 같고 또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황장엽 씨 방일 문제도 대단히 경각심을 갖고 보는 것 같고 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국내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외교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국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같은 비용을 투자하고도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문적으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와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때 통일부나 외교부가 어떤 정도로 협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실무자들도 같이 토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위정책과정에서 그냥 자료를 갖고 결정하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세 단계를 거치는데요, 우선 저희가 제일 먼저 정보를 입수하니까 실무자, 과장, 국장선까지 유관부서하고 회의할 때도 있고 전화로 협의할 때도 있고, 제일 첫 단계고요. 그다음에 NSC상임위원회 실무회의, 차관보급 회의에서 우선 의제를 상정해서 토론하고요, 최종적으로는 NSC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계륜 위원 보통 통일부와 현안문제 토론이 있다면 과장급들이나 실무자가 찾아가서 협의하는 형식입니까? 아니면……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자주 만나고 전화하고 있습니다. 오찬도 하고요.

○신계륜 위원 그 주제에 대해서 전화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문서교환하고 이렇게 하나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럼요, 아주 잦은 교류가 있습니다.

○신계륜 위원 일부 의견에 의하면 '교류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아닙니다. 교류는 잘 되고 있는데요, 다만 통일부는 역시 북한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희는 북한 말고 다른 나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시각차는 있지만 협의과정이나 협의 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계륜 위원 이번 탈북자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과정을 죽 거쳤나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럼요.

○신계륜 위원 외교부차관으로서 이번 탈북자 처리를 아주 능란하고 능숙하게 잘 처리했다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점검도 많이 해보고 이리저리 뒤집어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았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곤 합니다.

○신계륜 위원 저는 조금 준비가 부족했고 뭔가 능숙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외교부가 사실은 외교부 공식 영역이 아닌 것까지 포괄해서 전부 책임을 지는 외양을 갖고 있잖아요? 정보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책임지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밖에 있는 탈북자 문제를 처리하면서 아까 본예산이라든가 예산편성

이라는 방법보다는 온당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민간단체 인권단체 구호단체 쪽 활동을 독려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 옳지, 함부로 예산을 편성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여러분이 지적해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적 안 했습니다마는 외교부가 현원과 정원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그것이 지적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외교부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아마 줄이려고 해도 안 될 것이고 늘리려고 해도 안 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가는 듯싶은데 이 문제는 한번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저희도 올해는 꼭 정리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 측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처만 유일하게 한 60명의 초과인원이 있거든요. 그것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꼭 처리했으면 하고 저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계륜 위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이번에 자꾸 그런 문제를 부각시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공유해 나가면 처리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서 외교부의 업무 중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특정사안이 발생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고 이라크 내의 외교업무가 급증했을 때 외교부가 단순히 기존 인력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라크 파병이 결정된 이래로부터 대한민국 외교부가 이라크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했는가 점검을 해 본다면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원의 필요가 있을 텐데 사람을 어떻게 충원합니까, 그냥 파견합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증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옆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장기화 되면, 이번에도 몇 명이 입원을 했습니다만 그런 현상도 생기고 해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원은 늘리지 않더라도 2년, 3년 또는 짧은 기간들이라도 임시로 채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행자부하고 협의 중입니다.

○신계륜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행정지원 인력이라고 해외공관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전문직도 있나요? 대부분 보니까 운전수……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업무 보조 성격의 직원들입니다.

○신계륜 위원 그것으로 인해 국가가 중대사안에 대처하는 데 상당히 미흡하고 근본적인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이라크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외교부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관행의 잘못에서 오는 정보의 부족함 그리고 대처에 미숙함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강력히 어필해서 외교부 재량권을 넓혀서 탄력적으로 인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인원이 몇 명이라고 들을 때마다 이분들이 무슨 일을 담당하는가를 보면서 도대체 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걱정되거든요. 그런데 더구나 큰 현안이 생겼을 때는 담당하고 계신 분들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판단을 적절하게 내려주거나 아니면 외교부에 그런 판단을 일단 위임해 주어서 쓰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강력히 정부 내에 촉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조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감사합니다.

○신계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啓東 委員 먼저 고구려사 문제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단순한 학술적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외교부는 학술적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지, 고구려가 정말 우리 땅이고 우리 역사라는 입장 천명조차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초라고 생각하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외교통상부도 그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아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독도 문제도 똑같은 입

장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에 남과 북이 공동개발한 모바일게임에서 '독도를 지켜라'하는 명칭을 우리 정부가 '섬을 지켜라'로 바꿔 가지고 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왜 '독도를 지켜라'라고 하면 안 됩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일본이 자극을 받을 만한 행사를 벌일 경우 과연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갈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일본 측에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만들 때는 저희가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예를 들면 작년에 일본 우익청년단 4명이 독도에 상륙을 하겠다는 시도가 있어서 저희가 강력한 조치를 여러 번 취한 결과 스스로 물러난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일본이 어떤 입장을 취할 때는 강력히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땅이고 우리의 실효적인 지배가 미치는 땅인데 그것을 일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만한 사례를 만들 경우 우리한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朴啓東 委員 저는 그런 외교통상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면 툭하면 실효적 지배론만 갖고 얘기하는데 이승만 라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이후에 65년도 한일국교정상화 때 이미 한번 크게 잘못을 저질렀지요. 그래서 사실상 일본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기로 하고 우리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기로 하는 식의 내용적 합의를 봤기 때문에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도에는 우리 '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무슨 '수비대'라고 명칭하고…… 일본의 전략대로 따라 온 거란 말이지요. 무인도화를 유지시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항상 무인도화 유지시키고, 반면에 일본은 차곡차곡 국제법상의 분쟁지역으로 가져갈 준비를 한걸음 한걸음씩 더 강화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난 한일어업협정 때는 결과적으로 배타적 영역으로 선정하지도 못하고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들어 버리고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입도하는 것 자체를 정부가 허가제로 바꿔 놓고…… 이게 무슨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똑같은 사례를 고구려 역사 문제에서 또 반복을 하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일본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경우 일본이 지난번에 우표 발행 같은 것을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朴啓東 委員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차관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화하기 위한 6단계 계획안을 만들어 놓고 벌써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막았다고 하지만 다음에 민간인이 일본 해상 자위대의 호위 받아 가지고 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올라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쏠 것입니까? 그래서 국제사법위원회에 분쟁지역으로만 가져가면 자기네들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핵심적 근거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없습니다.

○朴啓東 委員 없어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독도는 우리 땅이지요.

○朴啓東 委員 아니,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핵심적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저희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朴啓東 委員 인정을 하건 안 하건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핵심적 근거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왜 우리 국민만 모르고 있어야 돼요.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핵심적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근거가 없습니다.

○朴啓東 委員 논리……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논리도 옛날 지도 몇 장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근거가 박약합니다.

○朴啓東 委員 안 그래요. 우리 영토에 대한 획정을 1910년을 기준으로 획정했다고 하고 독도는 대한제국으로부터 1905년도에 할양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상대의 논리와 논거도 모르면서 방어가 됩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강점에 의한 조약이나 그런 것을 전혀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런 논리는 인정할 수도 없고요.

○朴啓東 委員 그것은 싸우는 두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은 이것을 분쟁지역으로 가져가면 그 논리에 의해서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조치, 즉 유인도화와 2인 이상이 일정기간 경제활동을 하고 주거를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영토 획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일본의 그런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주고 있어요.

저 박계동은 독도에 본적지를 옮겨놨는데 주소지를 못 옮겨요. 독도에 집 한 채 짓고 땅도 사고 거기에서 낚시도 좀 빌려주고 그런 것도 하고 싶은데 이 정부가 허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그렇게 되면 실효적 지배를 넘어서 합법적 우리 영토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본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나라 정부냐 이거예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지금 합법적으로 저희 영토라고 저희는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朴啓東 委員 그러면 실효적 지배를 더 강화한 차원에서 독도 입도와 거기에 주민등록 취득과 경제활동을 보장할 방침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朴啓東 委員 우리 땅이라고 확신한다고 해 놓고 우리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아직도 검토하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부의 태도와 행위가 언명과 행위 사이에서 납득이 안 돼요.

유엔 국제법상 우리가 일정기간을 살고 2인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가면 일본이 더 이상은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안정적인 방법과 평화적인 방법을 두고 정부가 왜 막느냐는 거예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이미 똑같은 효과로 우리 땅입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2인 이상 살거나 하는 것은 우리 땅인 것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朴啓東 委員 이것 계속 하자니까 그런데 다음 국회에서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외교통상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의 영토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거예요. 영토를 못 지키는 외교통상부가 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 자기 땅이라면서 자기 국민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정부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 이번에 대통령께서 1년여 만에 외교순방을 나가시는데 러시아에 며칠간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곧 공식적으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朴啓東 委員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朴啓東 委員 스테이트 비지트(state visit)입니까, 어피셜 비지트(official visit)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스테이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朴啓東 委員 그러면 아직은 스테이트 비지트가 아닌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아니요. 그런 상태에서 진행을 시키고 확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朴啓東 委員 그런데 언론에서는 어피셜 비지트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5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스테이트 비지트도 아닌 어피셜 비지트로 대통령이 방문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것은 가서 실질적으로 뭘 검토하고 어떤 성과를 거양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형식은 두 번째로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朴啓東 委員 형식은 두 번째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5년 만의 방문이고 앞으로 우리의 경제적 미래를 볼 때 한·중·일·러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공식방문 정도 밖에 안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것은 러시아의 사정도 있는데요. 러시아는 한 2년 동안 어피셜 비지트 말고는 수용을 안 하고 있는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朴啓東 委員 그것 책임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朴啓東 委員 2년 동안 스테이트 비지트가 없었다는 거예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원칙적으로 없었습니다.

○朴啓東 委員 원칙적으로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하나도 없었는지는 곧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啓東 委員 2년 동안 스테이트 비지트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러시아는 잠자고 있는 나라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금년에는 하나도 없었고 작년에 있었는지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啓東 委員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한·러 간에 있어서는 시베리아와 극동에 자원 안보적 차원에서의 가스, 이르쿠츠크의 원유, 그다음에 사할린1, 사할린2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고유가로 치솟고 있는 미래에 모든 에너지를 중국이 다 잠식해 버리는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연해주 지역에 있어서 식량 안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연해주 개발에 대한 농업 부문에서의 협력 문제인데, 한국 국민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이미 협력하고 있는 상황과 범주, 그리고 그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미 정부를 다 경유해서 푸틴 대통령하고 직접 얘기하고 있는 이를 테면 사할린 농업지역에 북한 인력 25만 내지 최대 50만까지를 활용하는 49년 조차계획까지 있어요. 그것을 상세히 현지에서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원에 관한 박계동 위원님의 고마우신 말씀 잘 새겨듣고 보고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고구려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 이하 총리, 외교부장관, 또 전 직원이 직간접으로 분명한 태도를 너무나 여러 번 취했고 중국 측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강력할 수 없으리만큼 분명한 우리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 위원님의 이해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구려는 우리 땅입니다. 고구려는 우리 역사의 일부라는 것을 저희가 여러 번 천명을 했고 분명히 중국 측에 알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 위원님!

○최성 위원 열린우리당 고양 덕양을 출신 최성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그리고 17대 국회 개원 이후 외교부는 북핵 문제, 이라크 파병 문제, 한미관계 재정립 문제, 김선일 사건 그리고 이번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중차대한 외교적인 현안으로 말미암아 장관님을 비롯해서 차관님 그리고 외교부 직원께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호 간사, 박계동 간사와 사회교대)

이번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외교부의 대처도 외교부의 노력으로 5개항의 구두양해를 이루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국민과 언론은 이번 합의에 대해 상당한 불만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결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질의가 준비되어 있고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서면질의와 정기국회에서 심층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일괄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말미에 외교부에서 일괄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괄질의는 자칭린 주석의 방한에 즈음하여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논란과 관련한 공개질의로서 외교부와 자칭린 주석에게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교부가 답변하실 내용은 말미에 일괄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의견과 공개질의서를 가능하면 자칭린 주석에게도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국회 답변에서, 오늘 차관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측의 항의를 전달했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번 저의 상임위 공개질의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이번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와 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의는 외교부의 보고처럼 명실상부한 한중관계가 전면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7개항의 공개질의를 다음과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에서 의회기능을 수행하는 전인대의 정책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자칭린 주석의 오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을 겸임하면서 중국 국가서열 4위인 자칭린 주석의 방한은

무엇보다도 한중수교 12주년에 즈음해서 한국전쟁 등 지난 시대 양국 간에 이루어진 몇 차례의 아픈 기억을 뛰어넘어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선린 우호 협력국가로서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외교부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중관계는 심대한 위기국면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성실하고도 진지한 노력, 사상 유례없는 한중 경제협력관계의 증진,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한 한국과 중국 국민의 열망이 어우러져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구려사에 대한 왜곡조치는 단순히 학술적 차원의 논쟁을 넘어서서 한중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우려는 물론이고, 동북아와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중국이 쌓아온 노력을 일시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를 위험에 빠져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정신적 지도자인 강택민 전 주석의 오랜 친구로서 중국에서 중요한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칭린 주석께 다음과 같은 7개항의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외교적인 관례상 직접 만나서 토론하고 질의를 해야 되지만 상황의 절박성을 감안해서 상임위 질의라는 형태를 통해서 외교부에 대한 직접적 질의, 그리고 간접적으로 자칭린 주석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7개항의 질의에 대해 차관님께서도 말미에 일괄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하여 이번 한중 간에 구두양해된 사항은 비록 완전한 합의는 아닐지라도 양국 간의 오해를 푸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진일보한 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귀국 후 한국 정부가 요청한 중국 정부의 고구려사 왜곡 시정조치에 대한 부분은 공식 논평을 삼가고 있고 중국의 관영언론 또한 거의 보도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칭린 주석에게 묻고 싶은 바는 이번 한중 간에 합의한 5개항의 구두양해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역시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법률적 상식에 따르면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둘째, 최근 한중 간의 구두양해 과정에서 합의되지 못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사 부분의 왜곡에 이어 뒤이은 삭제조치는 이번 한중 양국 간의 합의정신에 의해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 역사는 중국 고대의 역사가 아니라 명백히 한국의 역사임을 차관님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명백히 이번 협의과정에서 인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두 분께 동시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최근 본 위원의 중국 방문과정에서 특히 고구려사 왜곡의 현장인 지안과 환런지역을 방문하는 동안,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지안에서 만난 '중국고구려사'의 저자인 경철화 교수에 따르면, 그리고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도 이번 고구려사 논쟁은 학술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이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자칭린 주석은 동의하는지 묻고 싶고, 만약 이런 입장을 중국 정부가 여전히 동의한다면 향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시정조치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 혹은 중국의 지방정부에 의해서 이미 취해진 고구려사에 대한 심대한 왜곡조처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예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과서 등 책자 12종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는 고구려사를 세계사에 편입하고 있지만 일부 교과서는 중국 역사상 일부 작은 나라의 도성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혹은 정부 소속 연구소에 의해서 이루어진 고구려사 왜곡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또 외교부 역시 이러한 실태를 본격적이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본 위원이 동료 위원과 함께 방문했던 지안박물관과 환런지역의 오녀산산성 사적진열관은 이미 '고구려는 중국 동북지방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다'라고 곳곳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물도 전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철화 교수의 '중국 고구려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구려사 전반을 심대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중 간의 구두합의는 이러한 중국 지방정부의 역사적인 왜곡 역시 당장 시정되고 원상 복구된다는 합의가 포함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중국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구려 유적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지안시 당국은 최근 시 도시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향후 50년간 현대화된 건물을 모두 옮긴다는 계획이며 이 일대에 고구려 유적공원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 계획은 사실이며 이 과정에서 고구려 역사유물에 대한 왜곡조처 역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할 수 있는지 중국의 주석에게 묻고, 또 외교부 역시 이에 대해서 어떠한 후속적인 감시·감독 기능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일곱째입니다.

이번 한중 간의 고구려사 왜곡 관련 회의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한국 역시 역사왜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주는 우리 땅이라는 식의 관광객 발언 등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에 의해서 타국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타국의 국가적 자존심을 심히 훼손시킬 어떤 조처가 있다면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한국에 의한 중국사의 구체적인 왜곡사항을 소상히 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정부 역시 어떤 내용을 항의 받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했고, 후속조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방한이 자칭린 주석 개인은 물론이고 중국 정부와 중국 국민에게 의미 있는 역사적 방문이 되기를 바라고,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고구려사 왜곡은 당장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본 위원의 공개질의서를 자칭린 주석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7개항의 공개질의에 대한 입장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우선 최성 위원님의 공개질의서 전문에 담긴 여러 가지 뜻과 정신들은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직간접으로 전한 여러 가지 입장과 우리 의사와 일치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최성 위원 완전히 일치가 됩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거의 모든 부분이 다 일치가 됩니다.

7개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물론 구두양해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요. 그러나 중국 측에서 계속 구속력을 가져도 좋을 만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중국 측이 더 이상 왜곡조치를 안 하겠는지 행동을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현재 취한 태도가 모호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전달을 했고 모호성을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세 번째, 학술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이지 정치화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중국 정부가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때 가능한 일이고, 만약 중국 정부가 정치화를 하면 이번 홈페이지처럼 그것은 이미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정치적인 맞대응으로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일부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왜곡이 있지만 현재 많은 중국의 국정교과서나 홈페이지, 출판물에서 고구려사는 한국인 역사의 일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노력도 아울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지방정부의 왜곡은 중지, 시정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에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중국 정부라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같이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두양해서에서 한 약속을 지킬지 지켜볼 것입니다.

일곱 번째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상세히 따져 물었고 중국 측으로부터도 답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에서 제기한 문제가 모두 우리 학계나 정계 일부에서 한 얘기이지 정부가 한 조치는 없었기 때문에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최성 위원 마지막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차관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7개항의 공개질의를 하면서 지금 질의

드리는 이 순간까지 사실 상당한 고민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공식 방문하고 있는 중국의 국가서열 4위인 주석에게 외교적인 관례상 다양한 외교적 루트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지만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 공개질의를 한 이유는 사실 이런 외교적인 민감한 현안이 제기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어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국민적인 분노와 관심이 쏠려 있는 외교적인 현안의 경우에 있어서 정부의 지혜로운 대처는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비공식 차원의 강경 대응과 공식적인 차원의 외교적인 멘트 외에도 국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또 국민적인 또는 시민단체의 역사왜곡을 시정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병행될 때 중국의 가공할 만한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7개항의 공개질의 내용이 외교부의 입장과 같다고 하기 때문에 이 공식질의가 끝나고 나면 저의 공개질의문을 드릴 테니 반드시 주석에게도 전달해서 이러한 우려가 본 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제기되었음을 전달해 주고 가능하다면 답변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다만 입법부에서 하시는 일을 저희가 직접 전달하는 것이 어떨지 형식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성 위원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朴啓東 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최성 위원님이 공개질의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자칭린 주석이 오늘 오후 5시에 도착한다고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김문수 위원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집중되어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역사왜곡의 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장을 방문하게 되어 있고 11시 반에는 대통령을 예방하게 되어 있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오찬이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리고 오후 2시에는 국무총리를 예방하게 되어 있지요?

대통령께서 고구려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중 양국 간에 우호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역사왜곡에 대해서 언급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말씀을 드렸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하시도록 건의드렸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 내용을 공개하기는 그렇겠지만 건의하신 내용이 우리 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반영된 내용이겠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외교부의 입장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문수 위원 특히 자칭린 주석이 서열 4위라고 하고 인민정치협상회의의 주석이고, 역사왜곡이 공산당 정권에서 당 중앙의 결정과 국가적인 예산집행과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보다 더 강력하고 분명하게 국민의 뜻을 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그럴 경우에 국가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대통령의 말씀을 지지하고 같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여야도 없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외동포들까지도 대통령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한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지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예방할 때 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도록 건의하셨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저희가 관련사항 보고를 드렸고 하시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 점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함께 노력하고 외교부에서 좋은 방안을 많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24일에 5개항의 구두양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성명을 낸 것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이 역시 동북공정 자체는 중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같은 생각이시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이번에 저희가 중국측과 협의할 때 하나 구분을 그은 것이 정부의 조치, 정부의 입장만 협의하자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북공정 연구 부분은 우리의 고구려사 연구재단과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연구 부분은 깊이 있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정부의 조치, 다시 말하면 중국 외교부가 행한

홈페이지의 왜곡조치, 또 그 시정부분이 모호성을 간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문수 위원 시정도 좋은데 이 자체는 중화주의 사상을 확립하기 위한 아주 체계적이고 거국적인, 역사적 도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당국과 국민들은 동북공정을 마땅히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될 것이고 저도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외교부에서도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복원하는 부분, 해방이후사 빼고 다 삭제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 부분은 지난 4월 22일경에 기원전·후 해서 한반도에 고구려, 신라, 백제 3국이 출현하였다고 되어 있던 것에서 고구려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의견을 전했더니 8월 5일에 아예 현대사 부분만 기술하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는, 그 홈페이지의 구조를 바꿔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록 왜곡은 아닐지 모르지만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이미 두 번을 고쳤기 때문에 그것을 다 돌려서 앞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방향이 어느 쪽이냐고 물었더니 중국 측이 하는 얘기가 이 문제가 정치문제화 된 데 대해서 유념하겠다는 뜻으로 대신했고 그것을 풀이하는 것은 앞으로 정치화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더 이상 왜곡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김문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학술적인 문제로 하자고 하면서 중국은 정치 정도가 아니라 거의 중화주의 자체를 정치를 넘어서 역사적이고 국가의 명운을 거는 정도로 집착하고 매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산주의의 획일성, 중앙집중성 때문에 어떻게 볼 때는 이것이 정말 단순치 않은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대응한다, 학술화한다, 학술적 해결이 원칙이다라는 유의 이야기는 바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현실과 전혀 맞지도 않는 현실인식이고 유효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국민적인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대응해야지 학술적인 해결원칙은 앞으로 합의문에 넣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것은 이미 지난 2월 15일에도 구두합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김문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지켰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래서 사실 그 문안을 보시면 중국 측에서는 당장 하기를 원했고 저희는 때가 아직 안 됐다, 노력해 보자고 해서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김문수 위원 저는 이번 합의도 학술적으로 하자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보다 더 차원을 높여서 학술적인 뒷받침은 하지만 방향이나 수위를 정치적으로 거국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시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도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中 중학교과서 이미 역사왜곡' 이 내용 보셨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김문수 위원 그저께 이 자리에서 현황보고할 때 중국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아직까지 일체 왜곡이 없다고 보고하셨거든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경향신문에 난 현상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번 가을에 쓰는 교과서들은 봄에 다 검증이 끝난 것이고 그때는 아직 왜곡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점검한 교과서에는 왜곡된 부분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보다 더 철저하게 하시고 예산 같은 것도 부족해서 요청하면 우리가 다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시정조치도 확고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중국문제만 하더라도 중국 주변의 피해 당사자인 여러 나라들하고 공동으로 협조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 부분은 사실 국제언론에 많이 보도되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외교 차원에서 저

희들이 그런 나라들과 접촉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자는 제안을 할 때 어떤 반응이 올지, 어떤 결과가 올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우선 일본이나 월남이나 이런 가까운 나라들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해 보시고 그 대책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에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서 국제학술대회 같은 것을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예, 있습니다. 내년 5월에 하버드에서 하버드의 한국학연구소가 주관해서 남북한 중국 미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 모여서 고구려사 학술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년 9월에 베를린 아태주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고구려 고분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의 부대행사의 하나로 고구려사 국제심포지엄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 재단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 두 가지가 있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예.

○김문수 위원 그 두 가지하고 기타 더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고 국제교류재단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문제에 대해서 차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탈북자들을 지원한 혐의로 수감 중에 있는 사람이 7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구속자명단이 있는데 이름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비밀 때문에 못 밝히겠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들이 구속되면…… 파렴치범의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국선변호사인제도가 있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김문수 위원 그런데 우리 교포가 해외에서, 법률적으로 아주 낯선 곳에서 구속이 되었다고 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구조활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저희 외교부의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김문수 위원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있느냐는 말입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중국 자체 내에도 국선변호인제도가 있다고 방금 국장이 보고를 합니다.

○김문수 위원 중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저희는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문수 위원 제가 딱한 사정을 죽 들어 보니까…… 국적 없는 분은 놔두고라도 우리 교민이나 현재 우리 국적을 갖고 있는 분이 해외에 나가서 구속이 되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국가의 손길이 미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예산을 좀 수립해서라도 뒷받침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이렇게들 안 합니까? 중국이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도 그런 제도가 전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법률구조활동 같은 것이 전혀 없는지 조사하셔서, 저는 국내보다는 오히려 외국에서 이런 경우에 국가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국내에서야 알음알음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최영훈 씨의 가족을 만나 보니까 5년형을 받아서 지금 1년 10개월을 살고 있는데 외교부에도 와서 만나보았는데 사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일본의 도움을 받고, 부인도 미싱사를 하는 등 딱한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탈북자를 도와주었다, 자기네들 말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5년형을 살아야 되는데 호소를 하면 중국에서는 '그러면 더 오래 살 것이다. 당신에게 더 큰 불이익이 있을 테니까 조용히 하라', 또 외교부 직원들도 '떠드는 것보다 조용하게 있는 것이 오히려 가석방이라도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구조 활동조차도 전부 봉쇄됩니다.

저는 이런 한심한 경우가 정말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보고, 저도 감옥살이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이들이 느끼는 절망과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거는 기대 같은 것이 전혀 없어지는 불행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탈북자 도와주는 일은 사실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그 부분을 대신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다른 지원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임위에서 탈북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탈북자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산발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오고 사회적으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통일부장관이나 외무부장관이 탈북자를 돕는 것이 대북관계를 경직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처럼 오해되는 일도 있었고 또 이에 대한 항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었고 또 올 가을에는 미 상원에서도 또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북자 실상과 탈북자를 지원하는 NGO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와 탈북자 지원 NGO의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주최의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啓東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탈북자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공청회는 양당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서 내일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문헌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정문헌 위원 정문헌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이니까 힘내셔서 마지막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사진 착탈식 여권을 가지고 다니지요?

(여권을 들어 보이며)

제가 제 여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2년 전에 발급받은 것인데 아직도 이렇게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조차도 여권에 사진을 전사하는 사진 전사 방식의 한 단계 발전된 여권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사진 착탈식 여권은 사진을 뗐다 바꿨다 하기가 용이해서 위·변조하기가 아주 쉽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정문헌 위원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의 사증 경우에는 사진이 인화되어서 여권에 붙이는 스티커 방식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스티커 방식으로 바꾸긴 바꾸었지만 아직도 사진을 안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최첨단 IT 기술을 가진 국가의 여권과 비자가 이런 수준이라는 것이…… 사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도 인쇄가 되어서 나가는 현실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 여권의 위·변조율은 사상 최고이고 동남아 등지에서는 수천 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의 세관 입국심사 시에 의심과 경계의 대상이 되고 더욱 철저한 입국심사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국가위신이 떨어지고 국민의 불편이 더 해 가기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 간의 비자면제협정 체결도 지연을 시키고 있는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시를 합격한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여 있다고 자부하는 외교부에서 왜 이렇게 한심한 작태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바이고, 외교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우리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도 잘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000년부터 여권의 사진 전사사업을 추진했고 현 반기문 장관께서 당시 차관으로서 사진전사기도입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진 전사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로비의혹만 뒤집어쓴 채 예산만 낭비하고 2003년도에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내에 있던 사진 전사 여권 발급장비들은 현재 그냥 창고에 박혀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장비들이 처리가 되었는지, 왜 이 사업이 실패를 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차관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복을 하고 추진하고 있고, 다행히도 지방별로 해서 단계적으로 올해 11월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시행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정문헌 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증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이미 전사식으로 전환

을 했습니다.

○정문헌 위원 사진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예.

○정문헌 위원 확실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 심양 영사관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사진이 전사되는 사증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스티커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문헌 위원 스티커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진이 들어가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이 안 들어가는 사증 용지도 조폐공사가 1차 납품했던 것은 좀 문제가 있었고, 품질이 조금 개선된 2차 용지 역시 원가 산정 없이 조폐공사가 해 달라는 대로 예전부터 집행을 했었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 문제가 제기되어서 지금 조폐공사와 단가를 낮추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이와 같은 사증까지도 사진 전사가 되어서 경제 10위 대국에 걸맞은,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외국으로부터 당당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탈북자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외교활동비에서 103만 달러, 예비비 69만 달러로 총 172만 달러가 집행되었고 난민 교섭, 해외 조사 등 1억 달러가 쓰였는데 여하튼 지금 외교부에서는 앞으로 북한 이탈 주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몇 가지 요소가 좀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과 북한 간에 변경지역관리 의정서라는 것이 체결되어서 그것을 엄격히 적용하면 탈북자가 줄어들고 그것을 좀 느슨히 적용하면……

○정문헌 위원 지금 체결이 되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그 의정서 때문에 중국은 기본적으로 탈북자는 북한 사람이고 밀입국한 불법 월경자로 취급해서 송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숫자도 많이 조정되고, 우리 탈북자정책의 근본적인 난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 의정서에 입각해서 지금 탈북자들을 북으로 송환하고 있는 것이군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것에 의해서 송환하면 할 수 없고, 빠져 나온 사람들 중에 우리 공관에 온 분들은 우리가 국내로 모시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여하튼 지금까지 바깥에서 볼 때는 외교부가 탈북자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외교부가 탈북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인식은 어떤 것입니까? 헌법에 기초한 우리 국민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좀 골치 아픈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탈북자 중에 희망하는 사람은 전원 우리 국민으로 입국을 도와드려서 입국을 시켜야 하고, 여기에 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비준해 주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탈북자를 우리 국내에 데리고 오려면 항상 체류국의 협력과 양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북한과 관계가 있고 또 만약 밖으로 알려지면 그 루트가 계속 활용되기 때문에 조용히 처리하기를 원해서 저희 조용한 외교는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여하튼 우리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우리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렇습니다.

○정문헌 위원 해결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인 것도 있겠고,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인도적인 측면이 훨씬 강한……

○정문헌 위원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탈북자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인도적인 측면, 국민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이 탈북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불법 월경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남한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유엔에서 인권문제로 중국에 압력을 넣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대단히 골치 아픈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차관께서 의정서 말씀도 하셨는데 중국이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태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외국 공관에 진입한 경우에는 이런 의정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두 우리나라에 넘기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중국이 탈북자수용소 형식의 수용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많이 제안이 되었습니다마는 유엔난민기구, UNHCR 사람들이 북경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탈북자들을 만나서 이 사람은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확연하게 해 주면 참 좋은……

○정문헌 위원 그것은 난민지위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그렇지요. 본인들이 가서 확인해 가지고 "나는 가겠다"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정문헌 위원 지금 이미 중국과 북한 간에 의정서가 체결되어 있고 중국이 탈북자 때문에 인권문제 등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린다면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지대에서 완충지대를 형성시키면서 완충지대 안에 수용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런 가능성을 중국이 시도한다면 압록강 서쪽 중국 영토보다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써 동쪽인 북한 영토 내에 수용소나 버퍼존이 들어올 공산이 크고, 그것이 시도된다면 그것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중국 공안이나 또 다른 외세인 중국군이 북한의 어느 한 지역이지만 상주할 수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안보적인 차원에서 보나 우리 국민,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나 탈북자문제는 외교부가 이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도 좀 늘려가면서, 지금처럼 예산을 여기저기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외교정책실 세항 1212번이나 재외국민영사국 세항 1312번 아래 세항으로써 북한이탈주민지원이라는 항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갖는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골치 아픈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최영진 저희가 영사 활동에서 가능한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외동포법에 의해서 직계비속 2대까지만 법률에 해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제가 심양 영사관을 방문했을 때 느낀 점이 영사가 열한 분, 그중에 총영사를 빼면 열 분이 하루에 700건 정도의 사증업무를 하십니다.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영사 숫자를 늘릴 수도 없는 입장에서 구조적으로 부패가 싹틀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단계적 자유왕래를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지금 시간관계상 다시 정기국회 때 짚겠지만 조선족 고려인에 대해서도 21세기 세계화에서 우리 민족이 세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천병 역할을 같이 해줄 수 있다는, 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면서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기본 인식 아래서 우리의 정책이 정해졌으면 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고 이번 결산에 관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朴啓東 정문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임종석·권영길·전여옥·정의화·이성권·유선호·김학원·이화영·박계동·최성·정문헌 위원님 등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중에서 한명숙·김혁규·전여옥·이성권·박계동·김문수 위원님 등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외교통상부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

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은 9월 정기국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 차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약 5분간 휴식을 취한 뒤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한 결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선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

4.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계속)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소관

○위원장대리 유선호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2003년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존경하는 임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민주평통 업무 전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유익한 정책제안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무처는 그 제안들을 적극 반영하여 민주평통 발전방안을 수립하였고 현재 내부 토론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입세출결산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0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사무처 61명 공무원 인건비로 총 27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기 1만 4940명의 국내외 전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경비로 1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상임·분과 위원회 운영, 통일 여론 수렴 등 통일정책 자문·건의를 위한 관련사업으로 6억 5400만을 집행하였으며 자문위원 연수, 정책포럼, 기관지 발간 등 역량 함양 사업으로 14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257개 지역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27억 3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기타 정보화 관련 사업 추진과 청사관리, 기관운영 등의 경비로 8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과 불용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한 예산은 총 2억 8700만 원입니다.

전체회의 출석수당 1억 7500만 원을 해외자문위원의 여비 1억 4500만 원과 홈페이지 개선 용역비 3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자문위원 연수 여비 부족분 4400만 원과 인건비 부족분 6800만 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총 1억 25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2%이며 집행 잔액입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국가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개선을 요하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민주평통의 발전을 위한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앉으시지요.

개요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의 추진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또한 통일만화공모전 사업도 2200만 원을 자체

전용하였고 2002년도에 이미 지적된 통일논의리뷰 발간사업 또한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로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자체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麗玉 委員 민주평통의 기본적인 역할은 남북화해협력 다음에 평화정책 실천의지 확산, 통일논의 활성화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이 민주평통의 역할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이라크 파병 국민 대토론회를 서울 등 6개 도시에서 여섯 번 개최한 것 맞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田麗玉 委員 왜 남북통일 문제와 관련이 전혀 없는 이라크 파병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에 북에 대한 이해 또 한미 관계에 대한 이해, 이런 국가적인 중요 안보·통일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라크 파병 문제 또한 많은 국민들 사이에 찬반으로 의견이 비등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도 결국은 나중에 미군의 재배치나 철수 문제와도 연관되는, 총체적으로 보면 이런 통일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서 국론 통합 과정을 국민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서 용해시켜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田麗玉 委員 지금 말씀 그대로라면 민주평통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는 셈이네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그러나 통일문제가……

○田麗玉 委員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평통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주평통에서는 어디까지나 남북통일 문제와 관련된 데에 예산을 써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광범위한 문제는 민주평통이 관여할 일도 아니거니와 국민통합이라든가 주한미군 재배치는 민주평통의 주관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외교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이것을 한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이것을 하라고 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민주평통에서 각 지역에 있는 협의회를 중심으로……

○田麗玉 委員 지금 남남 갈등이 더 중요합니까, 남북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민주평통이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기구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어서 국민들 사이에는……

○田麗玉 委員 그러면 이라크 파병이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데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한 문장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민주평통의 역할이라면 한 문장으로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평통 본연의 역할에서 어긋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래의 역할에서 비껴진 그런 데 예산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왜 민주평통이 이라크 파병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합니까? 누가 들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저희들 생각에 그렇게 이상한 일이고 그렇게 큰 지적을 받을 만한, 안 될 일이라면 그런 대도시에 공공연하게 광고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일을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우리 국민들 사이의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데 마침 외교·국방과 모두 연결되어 있는 주제가 국민들에게 부각되어서 우리가 그런 토론의 장을 진지하게 발전시켜 보자 이런 뜻으로 그것이 개최된 것입니다.

○田麗玉 委員 그렇다면 민주평통에서 남남 갈등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갈등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그렇게 모든 분야를 할 수는 없고요.

○田麗玉 委員 민주평통은 제가 지적한 대로 민주평통의 기본적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라크 파병 국민 대토론회를 6개 도시에서 여섯 번 개최한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당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민주평통이 하느냐 이겁니다. 왜 했는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남남갈등 해소가 민주평통의 역할이라고 어디에 써 있습니까?

민주평통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남북화해협력, 실천의지 확산, 통일논의 활성화, 해외 통일지지기반 지속적 확충인데 민주평통에서 왜 이라크 파병 국민 대토론회를 합니까? 이것은 다른 데서 하고 다른 데서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지 민주평통에서 쓸 예산이고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업 범위가 보다 명료하게 설정되어야 된다는 점을 신중하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토론회 취지는 사회에 분출하는 많은 견해 차이들을 용해하는 진지한 토론의 장을 열어간다는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田麗玉 委員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무처장께서는 앞으로 남남 갈등을 통한 모든 토론회를 민주평통에서 이렇게 예산을 써서 개최하실 생각이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아닙니다.

○田麗玉 委員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범위를 설립취지에 맞도록 보다 신중하게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田麗玉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을 다 따져 보니까 전에 비해서 전용·불용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처럼 남남 갈등이라는 것을 위해서 민주평통이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라크 파병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밀한 계획 없이 또한 아무런 생각 없이 예산을 관례적으로 일단 받고 보자는 식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런 전용·불용 비율이 높다는 것은 나름대로 민주평통에서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불용비율이 이렇게 높으면 일반 회사 같으면 상당한 문제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전용이나 불용이 없이 계획대로 전액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대개 자문위원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개최비용이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울 때 대개 70% 정도는 자문위원들이 참석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여비와 기타 제수행비용을 계산해서 하는데 가령 출석률이 좀 떨어져 가지고 65%밖에 참여를 못 했다 하면 상당한 액의 예산집행상 차이가 생기고, 이런 예측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예측도 보다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전용·불용이 없는 완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田麗玉 委員 제가 말씀을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듣더라도 민주평통의 운영이라든가 예산집행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것이 매우 부실하게 그리고 상식을 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석률이 그만큼 저조하다는 것은 그 회의는 하나마나하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왜 중요한 회의인데 출석률이 65%에 머뭅니까? 10명 중에 6명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인데, 서면으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 이화영입니다.

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라크 파병 관련 토론회에서 주로 토론되었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당시에 정부가 미국과 협의 과정에 있었고 또 현지 조사랄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에 대한 국민들 의견들이 여러 가지로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에 대해서 전문가들 중에 찬성하는 견해를 가진 연구자와 그것을 반대하는 연구자 또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 이런 다양한 우리 사회의 견해들을 그곳에 펼쳐서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됐고 특히 참여한 많은 주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토의하는 열린 토론으로 진행되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10월 3일부터 전체 해외지역회의가 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2004년도 회의는 10월 3일부터 개최됩니다.

○이화영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언제 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작년에는 해외위원들이 국내에 초청되어서 하는 회의를 9월 23일에 개최했습니다.

○이화영 위원 그때 했던 장소도 롯데호텔이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장소는 수가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1230여 명의 해외자문위원들이 초청되어서 회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숙소를 나누어서 이용하게 됐습니다.

○이화영 위원 이렇게 해외에서 우리 국내에 초청되어 오시면 자문위원 한 분당 들어가는 평균 경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대개 경비는, 여비는 예산규모에 따라서 10%에서 30% 범위에서 왕복여비를 지원하고 있고 여기 와서 숙박하는 것과 숙식을 저희 주최 측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위원 대개 1인당 얼마 정도 되는지 달러로 환산되어 있는 것은 안 나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작년 경우 1236명이 참여한 회의에서 전체 해외비용이 9억 15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이 1인당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위원 올해도 보면 이분들이 오셔서 묵는 숙소가 주로 워커힐, 잠실 롯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특급호텔인데 오랜만에 국내에 들어오신 분들을 우리나라의 좋은 호텔에 모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비용들을 조금 절약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더 실속 있게, 예컨대 한 번에 1236명을 다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외에서 평통자문위원 분들을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니까 대화가 잘 안 되고 별로 실속이 없더라, 일회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돌아가 버려서 고국을 방문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밀도 있게 할 기회를 못 갖는 경향이 있더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경비 얘기가 나왔었지만 재외동포센터 같은 건축물을 지어서 그런 쪽으로 체재경비 같은 것을 절약해서 이분들이 들어오는 횟수를 좀더 많이 한다든가 그리고 한 번은 전체회의를 하더라도 한 번은 권역별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개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좋은 의견이십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호텔을 모임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내 위원들 모임도 호텔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국내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연수시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비용이 의외로 큰 차이가 없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검소한 시설과 숙식비로 내실을 기하는 회의가 되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화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해외 위원들 회의에 러시아의 고려인 이주 140주년 기념사업 때문에 CIS 국가에 있는 평통자문회의 위원들이 모두 불참하게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일정이 조정됐기 때문에 참석하실 수 있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위원 그러면 그쪽 일정이 바뀌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140주년 기념행사는 9월 25일부터 28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해외 위원들 회의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이화영 위원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그런데 모스크바 쪽에서는 10월부터 문화제 같은 것을 하는 모양이에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고민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

념사업 때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러시아 측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전부 불참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만약에 불참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우리 대통령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곧 정상회담도 하고 연이어 이쪽 평통자문위원들이 그 지역에서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불참하게 된다면 이 비용을 절약해서 검소하게 다시 한번 권역별로 초청을 하는 계획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그 검토와 함께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하는 140주년 기념행사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학술모임을 하고 고려인들을 초청하는 한반도정세설명회, 통일환경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점도 연결시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炳國 委員 최병국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수고들 많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평통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이 방만하지 않았는가 이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정부 부처의 불용액이 보통 0.3%인데 평통은 1.2%입니다. 그렇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그렇습니다.

○崔炳國 委員 평균치보다 4배나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의 특수성상 그렇게 될 수 있다고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지역회의는 짝수 연도마다 개최되고 홀수 연도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崔炳國 委員 2001년도에는 한 65%인가 하는 자문위원들이 참석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崔炳國 委員 예산은 80% 정도 집행을 했네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崔炳國 委員 그리고 그다음 해에도 81% 집행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전체회의를 했는데 참석률은 66%이고 집행은 63%였네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崔炳國 委員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책정을 할 때는 100%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더라도 몇 %는 참석할 것이라는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대개 70% 선을 기준으로 예산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崔炳國 委員 참석률이 저조해 가지고 남은 돈은 다른 데 전용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崔炳國 委員 액수가 많다든가 적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평통이 11기까지 나갔지요? 평통자문회의법에 의하면 7000명 이상의 자문위원을 둔다고 되어 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그렇습니다.

○崔炳國 委員 지금 숫자가 몇 명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1만 4900명가량입니다.

○崔炳國 委員 그러니까 7000명의 두 배를 넘어섰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崔炳國 委員 갈수록 숫자가 많아진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개선안에 1만 명 이하로 개정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崔炳國 委員 진짜 평화와 통일 업무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자질도 있는 사람들로 엄선하세요. 해마다 가면서 부풀어져서 1만 5000명 상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고 또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70%라고 하는데 아예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70%로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그런 방향으로 검토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崔炳國 委員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법률과 똑같은 효력이 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崔炳國 委員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예산에 아예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항목에 8000만 원 상당을 썼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崔炳國 委員 이것은 법 위반이나 똑같습니다. “예”라고 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위법행위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 놓고 난 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예”라고 합니까?

예산은 법과 같습니다. 이것은 법 위반행위입니다. 처벌받을 행위예요. 어떻게 시정하렵니까? 그것을 책임을 지고 해야지 어떻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예산을 사용합니까? 여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 업무가 필요 없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지요.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용역비 3000만 원, 통일만화공모전 사업이 2200만 원, 통일논의리뷰 발간에 얼마 해서 여러 가지 해서 전체로 8000만 원을 썼어요. 국가의 돈을 아무 근거도 없는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산에 없는 지출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 가지 지적하신 사업들은 그전부터 국회에서 여러 차례 검토가 됐는데 반영이 안 돼서……

○崔炳國 委員 안 되면 되도록 해야지요. 되도록 해서 해야지 예산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炳國 委員 이것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8일에 미국 동부지역 협의회에서 금강산 온정리에 있는 어린이용 제빵공장 설립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그렇습니다.

○崔炳國 委員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미국 동부지역 5개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모금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현지에 구체적으로 착공하는 과정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崔炳國 委員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 그 공장이 설치되면 평통에서 직접 운영비를 부담한다든가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없습니다.

○崔炳國 委員 자체 내에서 한다는 것인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그것은 지역협의회에서 자문위원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崔炳國 委員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통일이라든지 남북한의 화해와 협조라고 하는 명제가 하나 서면 그것을 담당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기관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기관들이 다 달라붙어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필요하지요. 미국 동부지역에서 할 것 같으면 다른 나라에 있는 평통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라크 파병 국민 대토론회 비슷하게 평통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위원 김부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1년 1개월 됐습니다.

○김부겸 위원 아까 전여옥 위원님께서 그동안 평통자문위원의 회의 참석률 저조를 말씀하셨는데 1981년 출범 이후에 11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평균 회의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전체 평균 참석률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최근 2, 3년 사이에 65%선으로 이전보다 참석률이 떨어져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최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문위원 숫자가 많아진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평통이 처음 출범 당시에 비해서 위상이라든가 구성, 역할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적어도 이 시대에 통일문제를 둘러싼 민간단체의 통일운동 차원과 정부 차원의 통일정책을 넘어서는, 이를 조정하고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고 교환하는 기구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여전히 평통은 자기 역할과 자기 몫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그렇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렇다면 통일문제에 관한 유일한 민과 관의 의견교환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2003년 7월 25일 열린 제11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남남갈등 극복을 위해 보수·중도·진보 세력을 아우르는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균형적 구성과 활동 조화로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협의회별 통일특성화사업을 개발하고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그렇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렇다면 아까 전여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위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는 적어도 남북한의 여러 가지 긴장관계, 통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인식의 불일치를 조금이라도 좁혀 보자는 노력들, 그런 노력이 여기에서 남남갈등 극복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 중에 평통자문회의의 구성 자체가 그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겠다, 이전의 구성은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또 실제로도 고령층 남성 위주로 편중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성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견해들이 건실하게 반영되면서 그 속에서 그런 갈등들이 진지하게 토론이 되고 극복방안이 모색되는 것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처장님,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군요. 과거 권위주의정부 시대에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로 오는 과정에서 평통이라는 기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원들과 사회 성원들의 여론 불일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몇 차례의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상당 부분 우리 사회의 통일이라든가 남북갈등을 보는 시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지적받으신 왜 이라크 파병 문제에 관해서 민주평통이 순회토론을 개최했느냐 하는 지적은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문제가 남남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잡은 것이지 다른 정치적 의도나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그렇습니다. 그 견해 차이가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문제에 대한 견해도 거기에서 상당한 파생적인 토론들이 진행됐습니다.

○김부겸 위원 여기에 보니까 상임회의,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있던데 그럴 때 해외에서도 오시고 해서 모이면 적어도 통일 문제에 관한 당신들의 다양한 의견, 심지어 극과 극의 의견들이 토론되고 교환되는 장면이 많이 보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최근 들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일본에서 일본지역협의회 회의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위해서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한 250명가량 자문위원들이 모였는데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또 한미동맹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고 활발한 토론들이 진행됐습니다. 대체로 근래에 들어서 국내지역회의도 그런 토론 내용들이 매우 진지하고 성숙된 면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과거 권위주의정부 시절에 평통이 정부의 시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쪽에 무게가 가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정말로 각 세대 간, 계층 간에 혹은 남녀 성별 간에 다양한 이견들이 표출되고 교환되고 활발히 토론을 벌이는 장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아직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부겸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민주평통 자문위원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당연직 위원들이 있으시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그렇습니다.

○김부겸 위원 이분들한테 당연직으로 줄 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혹은 참여의 능동성을 확인해서 주는 방안은 어떤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지금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모두 평화통일을 위해서 참여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집단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형식적인 구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동안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불참한 기록들이 남아 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지방위원이거나 하시면 당연직이 되는 소위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자문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데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좀더 엄격한 규율과 기준이 있어야 평통이 자기 위상을 되찾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처장님,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우선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당연직을 이번에 삭제하는 법률 개정을 내부에서 토론 중에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 그렇지요. 서로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도록 해야지, 그냥 주니까 마치 귀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해외에 있는 동포들 사회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안을 확정하는 대로 국회에 보고해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민주평통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또 그때 처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김문수 위원 그 뒤에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서 준비된 내용이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몇 가지는 안을 마련해서 내부 검토와 의결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컨대 조금 전에 지적이 된 4200명 가량 되는 지방의회 의원들, 1만 5000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형식적인 구성이 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하는 법률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밖의 활동내용에 있어서도 몇 가지 주요한 골격을 점검해서, 내일 운영에 대해서 의결하는 의결기관인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내부 의결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 안이 확정된 다음에 국회에 보고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처럼 결산을 하러 오신 경우에는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개선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면 결산심사가 더 순조로울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그래도 어쨌든 의결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이 수정되면 혼선이 예상되어서 내일 의결이 되면 바로 국회에 보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에 통외통위에서 한 것도 다 나누어서 같이 봤습니다마는 내용 자체가 정세분석과 비슷해서 구체적인 운영의 개선이나 구성의 개선 부분은 내용에 없습니다.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성 중에 탈북자가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와서 정착한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통일의 중요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분들이 민주평통의 자문위원으로 참여될 수 있는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지금 현재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 12기를 구성할 때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현재는 탈북자들이 아무도 참여를 안 하고 있네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자문위원으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협의회에서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 중에 상당한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많습니다. 의사도 있고 교사 출신도 있고 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제가 몇 명 만나 보니까 상당히 좋은 분들도 많던데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민주평통의 활동을 내실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데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내년 12기 구성 때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상당히 생활상의 좌절도 많이 하고 생활조건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회의에 같이 참여하면서 자신들도 통일의 역군으로서 노력한다는 것은 사회 정착을 위해서도 좋고 통일에 대한 올바른 판단, 정보의 확보, 또 좋은 일꾼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라고 봅니다. 배제되는 것보다는 최대한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부를 통하든지 해서 이 사람들의 실태 같은 것을 자료로 분석해서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002년도 국감 때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자문 건의를 활성화해 줄 것이 지적되었네요. 그런데 그 이후에 회의자료, 자문 건의자료, 세미나 발표문 등의 자료를 보면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실적이 없어요.

올해 4월 26일에 북한 어린이 건강실태와 지원현황 및 과제는 상당히 좋은 관심거리라고 보는데 그때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나머지는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데 북한의 기본적인 인권, 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좀더 관심 있게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아까 전여옥 위원님과 김부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것도 관심가질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라크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긴급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와 남북 간의 일치를 위한 직접적인 노력을 할 것이 굉장히 많고, 민주평통자문회의는 예산도 제한되어 있고 기구도 크지 않은 만큼 힘을 집중하셔서 꼭 긴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이 통일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국제적으로도 미국의회에서 결의안이 추진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안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열린우리당 최성입니다.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한은 다음 주말까지 자료제출 및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상임위와 이번 토론과정에서 사무처장님께서 동료 위원님들의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수용을 하고 뼈아픈 자기개혁을 하시겠다는 의지는 대단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개혁의 의지가 실제 반영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평통은 사업이 너무 방대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문회의법을 보더라도 대북정책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다양한 통일의견 수렴에 집중하시고 방만한 사업을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 나중에 좀더 좋은 평가를 받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평통의 예산을 과연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내부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안은 국회에, 예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만약 평통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이런 일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러려면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은 공식적인 보고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국내외 평통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호텔보다는 좀더 저렴한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실 있고 유익한 협의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너무 잘 아는데 다른 재외동포재단에서 하는 행사처럼 평통이 항상 1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약간의 보조를 주기 때문에 한 번쯤 한국을 방문해서 졸다가 가거나 몇몇 지인을 만나고 가는 평통 행사가 되지 않도록 금년에 예정된 국내·해외 협의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트와 어떻게 실질적으로 내실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 7월 1일로 평통 위원의 임기가 1년이 지나서 2년 임기 중에 반이 지났는데 나중에 사무처장님께서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직 자문위원을 축소한다, 인원을 1만 명으로 줄인다는 것이 간단치 않을 것입니다.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러려면 거기에는 공정한 자격심사기준이 있어야 되고 단순히 출석률만 가지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격심사기준을 지금부터 명시해서 특히 해외 평통 협의회의 경우는 많은 지역에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인원을 축소하고 어떻게 재신임을 하고 어떻게 새롭게 충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해외·국내 평통위원에게도 그 부분을 사전에 숙지시켜 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국내·해외의 평통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평통위원 중에서 주류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재외교포 2세, 3세들의 현황, 그리고 소위 차세대지도자 네트워크라고 해서 기존에 추진되었던 해외평통 차원에서의 차세대지도자 네트워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의 현황, 그리고 명단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보화사업을 통해서 민주평통 홈페이지를 강화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 홍보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방문자 수도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석부의장의 임명이 너무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늦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늦어지는 이유가 가칭 남북나눔공동체 당연직 이사장으로 아마 수석부의장이 추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북나눔공동체의 추진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지난번에도 나왔고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것들의 모든 원천은 평통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통일관련 사업을 다 하려고 달려드는 의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평통이 욕심내기보다는 민주평통이 할 수 있는 일, 과거 민주평통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정말 민주평통이 할 수 있는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다음 주말까지 상세한 서면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범 위원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신상우 전 부의장께서 작년에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평통이 국내에서는 시시하지만 외국에 나가면 대접받는다, 나는 이것을 반드시 혁파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혁파한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보고를 받고 오늘 또 결산까지 하면서 별로 혁파된 것이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정수문제에 있어서 지난번 상임위 보고에서도 여야 위원들이 한결같이 정수가 너무 많아서 방만하고 밀도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정수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들어보면 법개정 작업을 한다, 7000명 이상으로 운영하라고 지금 법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운영의 문제이지 법개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1만 명으로 굳이 법개정을 해서 할 필요가 없지요.

현재 법 가지고도 7000명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평통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법률 위반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선 분명하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에서 해야 될 업무를 사무처에서 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고, 그다음에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숫자만 해도 500명 되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식 운영을 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는데 이 분과위원회가 5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회의하신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보면 50% 혹은 50%가 못 되는 참석률을 가지고 토의하고 의결해서 결정을 지어서 대통령한테 자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13조5항에 의해 원천 무효인 회의를 개의해 가지고 결론을 내서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엄격히 보면 명백하게 법률위반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처의 일은 법 9조에 의해서 자문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국한되어야 하는데 아까 여러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토론회를 개최해 가지고, 업적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문회의법 3조를 보면 이런 이런 사람을 뽑아서 대표급 인사로 국민의 통일의지를 대변해서 대통령한테 건의·자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자문위원을 상대로 역량을 함양시키는 연수를 실시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연수시켜서 역량을 함양해야 건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면 그동안 설치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선택했다는 문제가 됩니다.

2003년도 민간경상이전비 27억 37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234개 지역협의회에 운영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개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월 90만 원에서 백이삼십만 원 사이의 지원금을 협의회에 활동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박성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본사업비 26억 8800만 원 가운데 30% 정도에 해당되는 7억 9000만 원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나갔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업무추진비는 지금 수석부의장님이 민간인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으로……

○박성범 위원 수석부의장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현재는 공석입니다.

○박성범 위원 말하자면 계실 때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신 것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희택 예.

○박성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전여옥·유선호·박계동·한명숙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중 김문수·최성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은 9월 정기국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出席委員(22人)

권 영 길	김 문 수	김 부 겸	김 학 원
김 혁 규	박 계 동	박 성 범	박 세 일
신 계 륜	원 희 룡	유 선 호	이 성 권
이 화 영	임 종 석	임 채 정	장 영 달
전 여 옥	정 문 헌	정 의 용	최 병 국
최 성	한 명 숙		

○出張委員(1人)

김 원 웅

○請暇委員(2人)

신 기 남 홍 준 표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김 용 구

○政府側參席者

외교통상부

차관	최 영 진
외교안보연구원원장	한 태 규
기획관리실장	송 민 순
외교정책실장	이 선 진
의전장	백 영 선
아시아·태평양국장	정 상 기
북미국장	김 숙
중남미국장	신 승 철
아중동국장	이 광 재
조약국장	정 해 웅
문화외교국장	박 홍 신
재외국민영사국장	이 준 규
통상교섭조정관	정 우 성
다자통상국장	임 영 록
지역통상국장	조 태 열
국제경제국장	조 현
공보관	신 봉 길
감사관	이 재 붕

○其他參席者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권 인 혁
기획이사	박 경 태
사업이사	김 혜 원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김 석 현
총무기획이사	김 창 엽
개발사업이사	이 해 균
인력사업이사	김 상 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 광 규
기획이사	장 철 균
사업이사	김 승 웅